
- 2021년 함양군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목 차 〉

1. 승진임용 기준 변경 등 인사업무 부당처리	1
2. 산업단지 관리·감독 소홀	29
3.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처리기간 지연	38
4.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의무 위반	42
5. 산지일시사용신고 처리 부적정	49
6. 산림소득증대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53
7. 불법산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소홀	59
8.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64
9. ○○○○○○체험장 위탁 관리·운영 소홀	72
10. ○○○○○○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처리 부적정	76
11. 각종 체육대회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82
12. ○○○○ ##### 진출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86
13.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91
14.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03
15. ○○○○○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116
16. ○○의 ○○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123
17. ○○○ ○○○ ○○○지구 건축 및 부대공사 추진 부적정	131
18.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부적정	142
19. ○○ ○○○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15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승진임용 기준 변경 등 인사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승진임용 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매년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정기 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산정한 결원 수만큼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승진예정인원,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내부 인사게시망에 게시하는 등 승진임용 기준 변경 업무를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은 미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

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3. 1. 1. 신설개정 된 것으로 당시 개정이유는 인사기준 변경시 내부 공무원들에게 미리 알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20. 1. 10.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안)” 군수 방침문을 정하면서 [표1]과 같이 2018. 7. 23.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 기준(안)”부터 신규로 포함되어 1년 5개월 동안 유지해 오던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 승진 배제(이하 ‘당해기준’이라고도 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같은 해 1. 21.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부터 곧바로 적용하였다.

[표1] 정기인사 승진임용 기준 변경 현황

구 분	기 준	변 경
방침·예고일	2018. 7. 23.	2020. 1. 10.
내용	① 근무성적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① 승진후보자 명부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
	②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 승진 배제	② 삭제
	③ 연공서열, 업무능력, 성과,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자 결정	③ 업무능력, 성과, 군정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적용	2018. 8. 하반기 정기인사 ~ 2019. 7. 하반기 정기인사	2020. 1. 상반기 정기인사 ~ 현재

이에 따라 [표2]와 같이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2020. 7. 1.자 시행된 ‘2020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는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면 재임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으로 승진을 하게 된 반면,

당해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공무원들¹⁾이 배제됨으로써 결국 그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2020년 이후 ○급 승진자 현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승진임용일	전직급 승진일	공로연수	승진 후 근무기간
前○○○○○○○	○○	○○○	○○○○○○○	'20.01.20	○○.○○	'21.01.01	11월10일
前○○○○○	○○	○○○	○○○○○○○	'20.07.01	○○.○○	'21.01.01	6월
○○○○○○○	○○	○○○	○○○○○○○	'20.07.01	○○.○○	'22.01.01	1년 6월
○○○○○○○○	○○	○○○	○○○○○○○	'21.01.01	○○.○○	'23.01.01	2년

※ 함양군은 2019. 6. 30.부터 당초 1년이던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단축 시행함

한편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는 후 얼마되지 않아 2018. 10. 17. 개최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 의원이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의 승진임용 기준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였고, 군수를 대신하여 당시 ○○국장 ○○○가 “군수의 임기 중 승진인사 기준”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그 답변 요지는 조직 안정성을 위해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예정일 1년 이내의

1) 당해 기준이 계속 적용되었다면 '20. 1. 20. 정기인사시 승진후보자 ①○○○(현 ○○○○○○), ②○○○(공로연수 중), ③○○○(현 ○○○○○○) 중 ②○○○은 퇴직예정일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승진임용 기준 미달로 결격사유가 되어 ①○○○ 또는 ③○○○ 이 승진을 할 수 있었으며(당시 ○급 승진인원 1명), 결국 당해 기준이 변경되고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함으로써 ①○○○ 또는 ③○○○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20. 7. 1. 승진인사에서는 ○급으로의 승진후보자가 ①○○○(당시 ○○○○○○), ②○○○, ③○○○ 이었는데 ①○○○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이었으며, 이는 결국 ③○○○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음(당시 ○급 승진인원 2명, ①○○○, ②○○○).

공무원은 승진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제24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내용 중(본회의 회의록 발췌)】

○ ○ ○ ○ 의원 (질문)

이번 인사의 임용 기준을 보면 승진자에 대한 업무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사람은 승진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퇴직예정일은 공로연수 시작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 ○ ○ ○ ○국장 (답변)

「군수의 임기 중 승진인사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지난 8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의 인사운영기준에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정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의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연령 서열에 따라 무분별하게 승진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로 쇄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의 기준은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준비를 위한 제도로써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함양군 ○○과에서는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공무원은 승진임용을 배제한다고 기존에 없던 승진임용 기준을 신규로 정하였고,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당해 기준을 없애고는 1년 유예기간 없이 이를 바로 적용하여, 1년이 채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3항(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2.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일반직 7~9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2항 및 제7항에는 7급은 11년이상, 8급은 7년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으면 근속승진임용 후보자가 될 수 있고,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20. 6. 29. 인사위원회에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 및 승진심사를 하면서 당시 지방○○7급 ○○○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 심의·의결을 하였으며(○○○은 2020. 7. 1.자로 지방○○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됨),

같은 해 12. 24.에도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 및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지방○○7급 ○○○, 지방○○7급 ○○○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 심의·의결을 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2021. 1. 1.자로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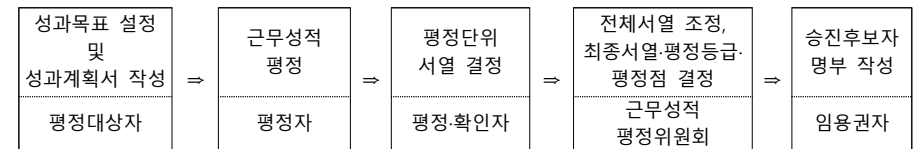
그 결과 함양군 ○○과에서는 2020. 6. 29.과 같은 해 12. 24. 두 번에 걸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7항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그림1]과 같이 매년 상·하반기에 평정개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지침’을 내부 결재 받고 근무성적 정기평정 실시계획 공문을 전 부서와 사업소, 읍·면 등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나.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고도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근평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평위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과·소·읍·면 등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여 근평위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9년 하반기 ○○○에서 제출한 ○○6급 서열명부에는 ○○○(1위), ○○○(2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최종 서열에서는 ○○○(24위), ○○○(31위) 순으로 조정하였고, 이를 근평위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등 [표3]과 같이 2019년 하반기 6명, 2020년 상반기 6명, 2020년 하반기 4명 등 총 16명의 근무성적평정 최종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3]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내역

구분	평정단위 기	직급	성명	평정단위 서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2019년 하반기 (6명)	○○○	○○6급	○○○	1	31	59.3
			○○○	2	24	61.4
	○○○	○○6급	○○○	3	55	49.5
			○○○	4	52	51.3
	○○○	○○6급	○○○	1	12	49.6
			○○○	2	5	62.0
2020년 상반기 (6명)	○○○	○○6급	○○○	1	9	46.5
			○○○	2	5	59.5
	○○○	○○6급	○○○	1	15	57.1
			○○○	2	14	57.9
	○○○	○○○	○○○	3	10	58.5
			○○○	4	9	59.5
2020년 하반기 (4명)	○○○	○○9급	○○○	1	13	61.0
			○○○	2	11	62.0
	○○○	○○○	○○○	9	19	37.5
			○○○	10	17	42.5

4.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가.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9명의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임용)하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응시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1)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등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에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원칙이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근무경력, 일정한 학위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근무경력)에 따른 임용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학위)에 따른 임용일 경우 다음 [표4]와 같이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근무경력)	
5급	1.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2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학위 등)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제3호(근무경력) 및 제9호(학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응시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및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만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 1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면서 자격요건으로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와 제3호(근무경력)를 모두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결국 제2호 또는 제3호 중 하나만 선택하였을 경우 응시가능한 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함양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공고하면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와 제3호(근무경력)를 중복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하나만 선택하였을 경우 실제 응시 가능한 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등 [표5]와 같이 함양군 ○○과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임용한 임기제공무원 29명 중 12명의 응시자격요건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함양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위반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임용일자	자격요건 부적정여부	비고
1	행정8급 (일반임기제)	○○○	'19.10.1	자격증+경력 중복	
2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0.3.13	자격증+경력 중복	
3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자격증+경력 중복	
4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자격증+경력 중복	
5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자격증+경력 중복	
6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0.4.20	학위+경력 중복	
7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20	자격증+경력 중복	
8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20	자격증+경력 중복	
9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9.1	자격증+경력 중복	
10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9.1	자격증+경력 중복	
1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9.1	자격증+경력 중복	
12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9.1.	자격증+경력 중복	퇴사

다. 공고기간 위반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 제2항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하며,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할 경우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

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이는 재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20. 8. 5. “제5회 함양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공고(학예사 1명)”(이하 ‘당해 시험’이라 함)을 하면서 기간이 9일(초일 불산입) 지난 2020. 8. 14.까지만 공고를 하였다.

이렇게 급한 채용절차 진행으로 당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던 ○○○(일반임기제 ○○8급) 1인만 서류 접수를 하게 되어 재공고²⁾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당해 시험에 대해 2020. 8. 18. 재공고를 하였지만 이마저 3일만 공고를 하여 결국 당시 채용분야에 근무하고 있던 ○○○(일반임기제 ○○8급) 1인만 서류접수를 하여 최종 합격하는 등 [표6]과 같이 함양군 ○○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임용하면서 14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 공고기간 10일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응시 가능한 자들에게 충분히 시험시행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응시인원 미달로 또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인사분야 통합지침).

[표6] 함양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기간 위반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임용일자	공고기간	비고
1	시설8급 (일반임기제)	○○○	'20.9.1.	9일 (재공고 3일)	재임용
2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9.10.14	9일	
3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9.10.14	9일	
4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9.10.14	9일	퇴사
5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9.10.14	9일	
6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0.3.13	7일	
7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7일	
8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7일	
9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7일	
10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8	7일	
11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20	8일	
12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4.20	7일 (재공고 7일)	
13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5.27	재공고 7일	퇴사
14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0.9.1.	재공고 2일	퇴사

라. 근무실적 평가업무 부적정(근무실적평가위원회 미운영)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4. 근무실적평가”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인사담당관 등 상위 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목표달성도를 최종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또는 근무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에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위한 근무실적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금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별도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3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는 5급이상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심사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병행하고 있었다.

설령 함양군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기능을 겸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기평가에 국한된 것으로 정작 중요한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최종평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평가한

평가서와 ○○과의 검토의견만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서장 등의 평가와는 별개로 ○○과의 검토의견만을 토대로 연장여부를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별지 제4호의2 서식 “성과목표평가서” [그림2]를 보면 본인 평가와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기간 연장 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함양군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없이 소속기관장이 최종평가를 하였고, 평가 점수와는 별개로 ○○과에서 검토한 의견만으로 당해 임기제공무원의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림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별지 제4호의2 서식(성과목표평가서)

성과목표평가서

1. 평가대상자·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임용구분	성명	임용기간	담당업무	평가기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임기제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추진일정	업무비중(%)	목표달성도 평가		
				본인평가(%)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최종평점점

마. 근무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에는 임기제공무원은 총 5년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는 총 근무기간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다시 5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2항 제8호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사안이 중요하여 반드시 대면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취지는 과거에는 당해 사업이 지속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시 채용공고 절차를 밟아 새로 임용을 하였지만, 2018. 7.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대면 심의·의결을 받아 다시 5년 재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도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을 추가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5년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성과가 탁월하여야 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대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성과가 탁월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쳐 신규로 임용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9. 10. 총 5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지방○
○7급(일반임기제) ○○○의 경우, 5년 근무기간 동안의 최종평가가 아닌 부서에서
제출한 1년간의 평가 점수(89점)만으로 막연히 성과가 탁월³⁾하다는 이유로 인사위
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고, 대면 심의·의결이 아닌 서면 심의·의결만 받고 다시 1
년간 근무기간을 연장하였다.

특히 함양군 ○○과에서는 당해 공무원의 최종평가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아닌 소속기관장이 하였는데 이는 “○○○의 성과목표평가서”에 근무실적평가위
원회의 평가란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덧붙여 최종평정점 89점은 함양군 성과연봉 등급결정 방침에 따르면 B(보통)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에 해당되지 않아 다시 추가로 5년 연장을 할 수는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함양군 ○○과에서는 부서에서 제출된 성과목표평가서의 결과와는 전혀 별개로
“당해 공무원의 정년이 2년이 채 안 남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하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였는데, 이마저도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2항 “서면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면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9. 10. 1. 서면
심의로 의결을 받았다.

이는 ○○○의 경우 추가 5년 연장 대상이 되지 않아 애초 인사위원회 안건 상
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함양군 ○○과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하였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3)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함양군에서는 연초에 성과연봉 산정을 위해 5급 이상 연봉제 공
무원들과 함께 임기제공무원들도 성과평가를 하였는데 「2018년 기준 5급 및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연봉 지급계획」에 따르면 평가등급별 점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점수분포	100~96	96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

* 성과가 탁월하다고 한다면 최종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야 하나 함양군에서는 ○○○의 부서장 최종평가가
89점(보통)임에도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막연히 성과가 탁월하다고 내부 검토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였음.

의결을 거쳐 추가 5년 연장 규정을 둔 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바. 소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함양군 ○○과에서는 “나”, “다”, “라”, “마”와 같이 2018년부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과도한 응시자격 요건 지정, 최소 공
고기간 미준수, 근무실적평가업무 부적정, 근무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등 임기제공
무원 채용 및 평가 업무 전반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주장 및 관련자 진술) 당시 함양군 ○○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내부게시망에 게시하는 정기인사 기준안 중 승진임용 기준에 포함된 “퇴직예정일
로부터 1년 이내 승진 배제” 내용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해 내용을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안에서 삭제하고 바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승진임용 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의 착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실무담당자인 ○○○는 매년 초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시
행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의 승진·전보 기준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
조의2 제3항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
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에서 말하는 승진임용 기준에 해당하고,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있는 인사기준은 임용령에서 말하는 승진임용 기준과는 별
개이며, 사전예고의 인사 기준은 정기인사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줄 알았
다고 진술하였다.

(당해 기준의 변경) 당해 기준은 민선 7기 현재 군수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단행한 2018. 8. 1. 정기인사에서 업무의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과감히 도입되어 인사운영 기준으로 채택되었고, 2019. 1월 상반기 정기인사와 2019.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에도 군수의 방침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계속 함양군 정기인사 운영기준으로 채택되어 내부게시망에 게시되었고 1년 5개월 동안 당해 기준을 위반하여 승진한 사례는 없었다.

(신의칙 위반) 따라서 함양군 공무원들은 향후에도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당해 기준이 2020. 1. 10.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예고”문에서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빠졌으며, 곧 이어 시행된 2020년 상반기 승진인사에서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었고, 당시 승진 후보자 3명중 명부서열 2번임에도 최종 승진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당해 기준이 계속 유지되었거나 또는 변경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은 승진에서 배제되었을 것이고,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1번 ○○○와 3번 ○○○ 둘 중에 한명이 승진자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2020. 7. 1. 시행된 2020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는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면 재임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승진후보자명부(1번 ○○○, 2번 ○○○, 3번 ○○○)에 포함되었고, 이 중 ○○○과 ○○○ 2명이 승진하게 되어 결국 당해 기준이 계속 유지되었거나 또는 변경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면 1번 ○○○은 승진에서 배제되어 결국 ○○○이 승진할 수 있었을 것인 바, 결과적으로 ○○○의 승진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독책임) 당시 실무담당자 ○○○는 당해 기준이 직원들의 승진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여 ○○담당 및 ○○과장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안”에서 빼게 되었고, 결재과정에서 ○○담당과 과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담당 ○○○과 ○○과장 ○○○는 당해 기준이 빠진데 대해 ○○○로부터

어떠한 상의나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급으로의 승진후보자는 모든 직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실무책임자인 ○○담당과 감독책임자인 ○○과장이 당해 기준이 빠짐으로써 ○○○과 ○○○이 승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과연 직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승진임용 기준을 ○○7급 실무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당시 ○○○ ○○담당과 ○○○ ○○과장은 실무담당자 ○○○가 결재상신한 2020년 상반기 인사기준안에 대해 이전 2019년 하반기 인사기준안과 비교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심지어 당해 기준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의 지위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과실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실무담당자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적용을 받는 승진임용 기준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상의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함양군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고 그동안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내부게시망을 통해 게시한 적도 없었다.

위 ○○○의 진술대로라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예고를 하였어야 하나, 함양군에서 내부게시망에 게시하는 것은 반기별로 하는 정기인사 기준안이 전부였다. 따라서 ○○○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감사자 판단) 따라서 매 반기별 정기인사 전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는 정기인사 기준에 포함된 승진임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기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함양군 ○○과에서도 이를 법령 해석의 착오라고 하면서 법령 위반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시 실무담당자 ○○○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업무를 함에 있어 직근 상급자와 상의 및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당해 기준이 유지되었거나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자들에게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그 비위 정도나 과실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담당 ○○○과 ○○과장 ○○○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기준(안)” 결재과정에서 승진임용 기준안 등을 이전 기준안과 비교하는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당해 기준이 삭제된 줄도 모르고 막연히 결재를 하였다는 것도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의 지위에서 직무상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한 징계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함양군 ○○과에서는 2020년에는 코로나 방역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한해동안 2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였다.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만 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의 신설배경에는 2011. 3. 7. 이전에는 근속승진을 7급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7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고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다 보니, 기존 7급까지의 근속승진을 6급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며 다만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하도록 제한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인정하되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함양군 ○○과 실무담당자 ○○○은 당해 규정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2020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6. 29.과 12. 24. 두 번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그 결과 상정한 후보자 3명이 모두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근속승진 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함양군 ○○과에서는 부서에서 제출되는 서열명부가 1위, 2위, 3위 등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위, 1위, 3위 등 순서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근평위의 최종 평정점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촉박하게 근평 입력 작업을 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가 바뀐 것이지 어떠한 의도적인 서열 변경이 아니었으며, 이는 실수로 입력된 건수 모두 승진 후보 대상자와는 거리가 먼 직원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승진대상자와는 거리가 먼 직원들이라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근평위 최종 서열명부에서 순위를 바꾸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제3항 “근평위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 6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한 당시 실무담당자 ○○○와 2020년 상·하반기 10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한 당시 실무담당자 ○○○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가. 응시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함양군 ○○과에서는 작은 군 단위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관련 법령보다 높은 수준의 근무경력과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였고, 나라일터나 타 지자체에서도 자격증 소지와 근무경력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와 제3호(근무경력)를 응시요건에 모두 요구하는 것이 법령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타 지자체에서도 법령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함양군 ○○과에서 모든 채용에 있어 제2호와 제3호를 중복 요구하였다면 일용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별로 제2호 또는 제3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을 준수한 것도 많아 당시 채용부서의 의견 등 상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요건을 정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응시요건 제한으로 응시자가 없어 채용고를 반복하였고, 실무담당자들이 응시자격요건에 있어 사전에 법령 위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 과실의 경중이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공고기간 위반

함양군 ○○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9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고기간을 준수하였지만 2020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10일의 최소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함양군 ○○과에서는 채용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방계약법에 서는 채용고기간을 본 공고기간보다 짧게 공고하는데 기인한 단순한 논리적 착오이며, 공고기간을 9일로 한 것은 초일불산입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10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채용고를 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지방계약법과 인사관련 법령은 제정 목적과 대상, 적용범위 등이 전혀 다른 법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2019. 2. 7. 공고한 제2회 함양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본 공고를 단 7일만(2020. 2. 7. ~ 2. 14) 한 것도 있어 초일불산입 원칙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짧은 공고기간으로 임용시험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접수인원이 부족하여 결국 채용고가 반복되었으며 그마저도 기존 근무하였던 직원만이 단독 접수하여 최종 합격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다. 근무실적 평가업무 부적정(근무실적평가위원회 미운영)

함양군 ○○과에서는 매년 3월 성과연봉 책정을 위해 연봉제 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이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령 함양군의 주장이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지만 정기평가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최종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평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당해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부서장(또는 소속 기관장)이 평가한 자료가 전부였다.

단언컨대 성과연봉책정을 위한 정기평가도 중요하지만 당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는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최종평가 부분에 있어서 함양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함양군은 조속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 특성에 맞는 임기제공무원의 평가 기준, 방법, 그 결과의 반영 절차,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함양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근무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해 방법, 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함양군에서는 근무실적 자체가 객관적·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단지 1년의 성과평가 점수(89점)만으로 성과가 탁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 근무기간 연장 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당해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위 함양군의 주장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해놓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당해 공무원의 성과를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해도 되며, 당해 공무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와는 별개로 당연히 근무기간 연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즉 성과목표평가서의 근무실적 평정점이라는 요식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임용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법령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방법, 기준, 절차, 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실령 해당 부서에서 근무기간 연장 요청을 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과에서 법령에 기초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의 의결만 받고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신규로 임용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며,

근무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정작 ○○과에서 근무기간 5년 전체의 최종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제출된 1년 평가 자료만으로 근무기간 연장 평가를 하고선 감사에 지적되자 5년간 전체를 하였으면 성과가 탁월했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최초 5년의 범위 안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로 다시 5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중요하여 기존 연장 심의와는 달리 인사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령 제21조의4 제5항, 제9조의4).

그럼에도 함양군 ○○과에서는 대면심의 대상을 서면심의로 받고는, 인사위원회 안전 상정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히 적시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근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안전으로 상정한 것도 잘못되었으며, 대면심의를 해야 할 것을 몇 줄의 근무기간 연장 검토 의견이 전부인 서면만으로 형식적으로 심의한 인사위원회의 운영도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함양군 ○○과에서는○○○의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아 신규채용보다는 근무기간 연장을 택하였고, 감사에 지적되자 함양군을 산촌 오지라고 명명하며 여건이 열악하여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참고로 법령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연장 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도 함양군과 같은 이러한 자의적인 주장과 판단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5. 소결론 (징계요구 양정)

함양군 ○○과에서는 ①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②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③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④ 임기제 채용업무 등 부적정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대부분 실무담당자의 과오를 인정하였다.

특히,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건은 관련법령 해석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도 있는 만큼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당시 관련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실무담당자 ○○○○○○ ○○○, 실무책임자 ○○○○○○ ○○○ 및 감독책임자 ○○○○○○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경징계”처분함이

또 다른 실무담당자 ○○○○○○ ○○○의 행위는 위 “①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승진임용기준 변경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과 실무담당자 ○○○○○○ ○○○(현 ○○○○), 실무책임자 ○○○○○○ ○○○(현 ○○○○) 및 감독책임자 ○○○○○○ ○○○(현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② 그리고 근속승진 임용업무, 근무성적평정 업무,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③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임용 기준 변경, 근속승진 임용,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운영 업무 전반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④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이 부당하게 변경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평정점을 당초 평정단위별 서열을 반영하여 수정하시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함양군 특성에 맞는 임기제공무원의 평가 기준, 방법, 그 결과의 반영 절차,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함양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요구·통보

제 목 산업단지 관리·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은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고자 산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 촉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를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면제, 국고지원 확대(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단지조성비[전문농공단지 및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함])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1]과 같이 산업단지의 종류는 지정목적에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고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권자,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 및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정하고 있다.

[표1] 산업단지 종류 및 지정권자

구분	지정목적	대상지역	지정권자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 과학 기술산업 육성	• 개발촉진 필요한 낙후지역, 기간산업·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 시·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시·도지사	시·도지사
도시첨단 산업단지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공단지	• 농어민 소득증대	• 시·군 내에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시장·군수	시장·군수

[출처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산업집적법」 제30조]

한편, 「산업집적법」에 따른 토지규제의 근간은 산업용지를 본래 목적대로 실제 사용할 자에 한하여 산업용지를 소유하게 해 투기적 수요의 산업용지 취득을 방지해 토지가격을 안정시켜 토지비용이 제조원가로 그대로 반영되어 제조업 등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공장등록을 통한 공장의 관리,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및 미이행시 벌칙조항 등을 통한 규제 등의 산업단지 입주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적기공급 등 산업용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용지를 분양받는 자가 조성원가 수준의 취득 또는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도록 해서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5년간 실사용 해야 자유매각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신청으로 매수한 자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도 분양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실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처분제한의 핵심내용은 i) 매수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한 자로 한정하고 ii) 매도가격을 최초 분양 당시 또는 매수가격에서 이자 정도만 합산토록 해 실제 해당 산업용지에서 공장 등 실제 할 자에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서 [표2]와 같이 총 8개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분류하고,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배치해 처분·임대·분할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2] 함양군 관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단위 : m², 억원)

구분	위치	면적	사업비	준공일	사업시행자	분양율	관리기관
계	8개소	1,622,049	1,707.6				
○○○○단지	○○읍 ○○리	40,479	6.6	1986. 5.	○○○○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101,965	36	1993. 7.	○○○○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136,170	44	2005. 5.	(주)○○○○○○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146,749	89	2007. 6.	(주)○○	100%	함양군

구분	위치	면적	사업비	준공일	사업시행자	분양율	관리기관
○○○○단지	○○면 ○○리	83,513	71	2009. 12.	○○○○(주)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275,462	156	2011. 9.	(주)○○○○○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99,351	79	2013. 4.	(주)○○	100%	함양군
○○○○단지	○○면 ○○○리	738,360	1,226	2017. 2.	(주)○○○○○	73%	함양군

[출처 : 함양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9항 및 「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제조업 등의 영위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⁴⁾와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경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조성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1항은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후 산업용지를 실사용할 자(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는 분양받거나, 처분신청으로 매입하거나, 경매 매수자로부터 양수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는 해당 산업용지를 3개월 내 입주계약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 해지 등) 제1항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4) 조성된 산업용지 3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잔여 산업용지는 분양하는 민간개발

상기사항 위반시는 「산업집적법」 제43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명령, 제43조의3은 재산처분·양도 의무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제52조 제1항은 형사고발, 제55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표3] 행정처벌의 종류 및 처분내용

구분	적용대상	처분내용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명령 (동법 제43조)	• 제42조 제1항에 따른 2년 이내 공장 건설 미착수한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산업용지 임의처분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양도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제3자 매각
이행강제금 부과 (동법 제43조의3)	• 제43조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20% 부과 (매년 1회 의무이행일까지 반복 부과)
형사고발 (동법 제52조 제1항)	•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산업용지 임의처분한 경우 • 제40조의2 및 43조에 따른 관리기관 양도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제3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동법 제55조)	•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농공단지의 경우

○○○○○단지의 경우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주)○○○○○은 보유한 산업용지 3필지, 43,858.4㎡(조성원가 2,194,674,336원)를 [표4]와 같이 2017. 9. 1. ○○○○, ○○○○, ○○○○ 등 3개 입주예정업체(대표자 ○○○)에 각각 조성원가 수준⁵⁾(취득세 신고가액 2,631,504,000원 확인)으로 임의 매각 하였고, 이보다 뒤늦게 산업용지 처분절차의 선후가 바뀌어 「산업집적법」 제38조,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7. 10. 23. 관리기관(함양군)에 산업용지를 처분신청하여 2017. 11. 23. 관리기관(함양군)으로부터 입주조건을 유치업종(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확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기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6개 업종)으로 한정하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콘크리트, 아스콘 직접제조 시설업종(레미콘 공장)은 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체, 인근 주민민원, 대기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산업용지 처분승인을 받았으나

5) 취득가격 = 조성원가 + 이자 + 비용 + 취득등록 세제금

[표7] 입주계약 미체결 및 미착수 산업용지

(단위 : m², 원)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입주계약일	분양가격
계	4필지		36,633.5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3,318.5	미체결	조성원가 73,030원/m ² (240,999원/3.3m ²)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19,340.9	미체결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9,491.7	2013. 1. 2.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4,482.4	2013. 4. 23.	

[출처 : 함양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부서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업체인 (주)○○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체결기한(취득일로부터 1년 : 2021. 9. 10.)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2021. 1. 20. ~ 2021. 7. 18.)”을 통해 입주업종을 완화·확대하여 공장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 부서는 장기 미착공⁶⁾ 상태인 ○○○○○○○(주)와 ○○○○○○○(주)에 대해서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제43조에 따른 재산 처분명령,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제52조에 따른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해당 기업이 경기하락으로 인해 경영상 투자 어려움과 업종전환을 위한 소요기간 발생 등의 사정(관리기관인 함양군에 공문으로 의사표시한 적 없음)을 고려하였고, “○○○○○○○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2021. 1. 20. ~ 2021. 7. 18.)”을 통해 입주업종을 완화·확대해 업종전환, 부실기업 인수 등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공장건설 착수 연장 요청도 없었고 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받아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을 통한 규제’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특정기업이 그 동안에 장기간 산업용지를 과도하게 취득·확보하여 산업용지가 필요한 실수로 중소기업의 산업용지 취득기회 상실하게 하였다.

6)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는 공장 가동율, 장기 미착공 등 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매분기마다 시·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정함

그 결과 ①항(○○○○○○○단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지의 전체 산업용지(61,431m²)에서 분양 후 공실면적(36,633.5m²)이 늘어나 결국 공장가동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59.6% 감소)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매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주)○○는 위 산업용지 2필지(22,659.4m²)를 담보로 2020. 9. 17.과 2020. 12. 15.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2,314,000,000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도 없이 물건적치(토사)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주기업체 ○○○○○○○(주)와 ○○○○○○○(주)의 경우도 위 산업용지 2필지(13,974.1m²)를 담보로 2013. 11. 25.과 2014. 10. 24. & 2017. 4. 12.과 2017. 4. 2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0원, 276,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유용하고 있다.

[표8] ○○○○○○○단지 산업용지 가동률

(단위 : 개, m²)

전 체(A)		가 동(B)		미착공		가동률 (B/A)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7	61,431	3	24,797.5	4	36,633.5	40.4%	

[출처 : 함양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표9] 산업용지 담보물건 제공 현황

(단위 : m², 원)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근저당 설정	
				일 자	채권최고액
계	4필지		36,633.5		3,790,000,000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3,318.5	2020. 9. 17. 2020. 12. 15.	2,314,000,000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19,340.9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9,491.7	2013. 11. 25. 2014. 10. 24.	1,200,000,000
○○○○○○(주)	함양군 ○○면 ○○리 ○○○	공장용지	4,482.4	2017. 4. 12. 2017. 4. 24.	276,000,000

[출처 : 함양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양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산업단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단지와 ○○○○단지에서 장기간 입주계약을 미체결하였고,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제재조치를 지체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실무책임자 ○○○○과(현 ○○○○과) 지방 ○○○○ ○○○**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산업집적법」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1항, 제55조 등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불법 매각한 (주)○○○○○에 대하여 고발, 장기간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하였고, 공장건설 미착수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산업용지 처분절차 진행,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도 없이 물건적치(토사)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처리기간 지연
소	관	함양군(○○○○과, ○○○○과, ○○○○○○소, ○○○과, ○○○○○과, ○○○○○과)
조	치	함양군(○○○○과, ○○○○과, ○○○○○○소, ○○○과, ○○○○○과, ○○○○○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에 관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군수는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과 등 6개 부서)에서는 [표1]과 같이 2018~2020년 기간 동안 총 28건의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미속과 처리기한 착오 등을 사유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민원을 지연처리하였고,

특히, ○○○○과 ○○○○담당에서는 2019년 4건⁷⁾, 2020년 14건⁸⁾으로 총 18건의 개간대상지 신청 민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민원사무를 소홀하게 처리함으로써 해당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민원처리기간 초과현황 (단위 : 건)

계	1일	2일	3일	4일	5일이상
28	10	6	5	4	3

[출처 : 함양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참조]

또한 총 27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기간내 답변하는 등 민원처리는 이행하였으나 업무소홀로 새울시스템 입력을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표2] 새울시스템 입력 지연 명세

구 분	건수	○○○○○과	5	○○○○○과	53
계	270	○○○○○과	82	○○○과	9
○○○○○○관	1	○○○○○과	28	○○○○○과	21
○○○○○과	29	○○○○○과	9	○○○○○○소	2
○○○○○과	4	○○○○○과	7	○○소	2
○○○○○과	2	○○○○○과	16		

7) 2019년 전체 민원처리 42건 대비 9.5%(4건)에 달함
8) 2020년 전체 민원처리 36건 대비 38.9%(14건)에 달함

따라서, 민원처리 주무부서인 ○○○○과에서는 각 부서의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에 대해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수시 확인·점검 및 독촉장 발급을 실시하지 않아 민원 처리기간 경과, 새울시스템 입력 지연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별첨] 민원처리기간 초과 세부내역 (단위 : 일)

구분	민원명	민원인	접수일시	처리기한	초과일수	지연처리 사유
계	28건				71	
○○○○과	건축허가	○○○	2018-04-26	2018-05-03	1	업무처리 미속
○○○○과	건축물철거명실신고	○○○	2018-10-19	2018-10-19	3	업무처리 미속
○○○○○○소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주)○○○○○	2018-10-24	2018-11-01	1	업무처리 미속
○○○○과	진정	○○○	2019-02-08	2019-02-18	1	업무처리 미속
○○○과	판매영업영폐업신고서	○○○	2019-03-15	2019-03-15	3	처리기간 착오
○○○○○○소	진정	○○○	2019-03-21	2019-03-29	4	업무처리 미속
○○○○과	진정	○○○	2019-04-05	2019-04-24	1	업무처리 미속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19-04-22	2019-04-30	2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19-05-07	2019-05-15	6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19-07-09	2019-07-17	1	업무소홀
○○○○○○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2019-08-12	2019-08-16	1	업무처리 미속
○○○○○○과	도서관 폐관	○○○	2019-11-26	2019-11-26	2	처리기간 착오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19-12-16	2019-12-23	4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1-17	2020-01-29	1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1-28	2020-02-05	2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2-03	2020-02-11	7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2-17	2020-02-25	2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3-02	2020-03-10	1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3-06	2020-03-16	3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3-09	2020-03-17	2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3-26	2020-04-03	3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4-16	2020-04-24	3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7-01	2020-07-09	4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7-01	2020-07-09	4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09-04	2020-09-14	2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10-19	2020-11-20	5	업무소홀
○○○○과	개간대상지 선정	○○○	2020-11-24	2020-12-29	1	업무소홀
○○○○과	건축물지번 변경신청	○○○	2021-01-06	2021-01-06	1	업무처리 미속

관계기관 의견

함양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민원 처리기간 지연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사무 처리 상황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정확하게 해당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개간 대상지 신청 민원을 반복적으로 처리기한 초과하여 민원사무를 소홀하게 처리함으로써 해당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킨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 실무책임자 ○○○○과(현 ○○○○ ○○○관) 지방○○주사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담당직원이 법정 민원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의무 위반

소 관 기 관 함양군(○○○○○○관)

조 치 기 관 함양군(○○○○○○관)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소 ○○담당(○06급) ○○○은 2018. 8. 1.부터 2020. 12. 31.까지 ○○○○실 ○○담당 직위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산하 기관의 감사·조사업무 등을 담당 또는 총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거래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과의 거래시 사전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사후 신고)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1]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요령

구분	주요내용	비고
규율대상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거래제한 대상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거래제한 내용	•금전차용,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조 치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위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표2] 직무관련자 판단기준

관련규정	주요내용	비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정·질의·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표3] 직무관련 공무원 판단기준

관련규정	주요내용	비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공무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따라서 함양군 소속 기관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된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8. 8. 1.부터 2020. 12. 31.까지 ○○○○실 ○○담당 직위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산업”과 [별첨] 수의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 ○○○ 탕비실 싱크대 및 수납장 제작 구입 설치 등 총 59건 227,998,340원(○○ 40건 176,292,540원, ○·○ 19건 51,705,800원)의 물품제작·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직무관련자 거래 사전 신고(또는 사후 :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위 사람은 공직내부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신분·직무상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담당 실무책임자의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 큰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별첨] 수의계약 체결 명세

(단위 : 원)

계약명	계약일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자	발주처
59건		227,998,340	227,998,340		
수납장 선반 등 추가 구입	2018-08-17 (2018-08-21)	700,000	700,000	○○○○○ 산업	○○과
캐비닛 등 수납장 제작·설치	2018-08-11 (2018-08-21)	2,230,000	2,230,000	○○○○○ 산업	○○과
문서보관함 선반 구입	2018-08-21 (2018-08-31)	48,000	48,000	○○○○○ 산업	○○○○과
○○마을회관 신축공사 물품 구입	2018-08-29 (2018-08-31)	4,015,000	4,015,000	○○○○○ 산업	○○면
이중캐비닛 제작 구입	2018-09-20 (2018-10-05)	320,000	320,000	○○○○○ 산업	○○○○과
업무용 책상 등 집기 구입	2018-10-04 (2018-11-05)	618,000	618,000	○○○○○ 산업	○○과
청사 신문함 수선	2018-10-11 (2018-11-15)	300,000	300,000	○○○○○ 산업	○○과
○○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집기 구입	2018-11-01 (2018-11-08)	3,560,000	3,560,000	○○○○○ 산업	○○면
○○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1.3층)(2차분) 관급자재(문서함)	2018-11-15 (2018-11-22)	17,500,000	17,500,000	○○○○○ 산업	○○읍
○○실 원형 테이블 제작	2018-11-16 (2018-11-16)	1,900,000	1,900,000	○○○○○ 산업	○○○○과
○○○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물품(집기류)구입	2018-11-28 (2018-11-30)	4,686,000	4,686,000	○○○○○ 산업	○○○○과
○○○○○예방관리센터 가구 제작 구입	2018-11-15 (2018-12-19)	19,080,000	19,080,000	○○○○○ 산업	○○○○과
○○○○센터 내 화장실 수납장 등 구입	2018-12-17 (2018-12-31)	1,430,000	1,430,000	○○○○○ 산업	○○과
주민자치위원회 다목적센터 운영 물품 구입(사무용가구)	2018-12-20 (2018-12-28)	330,000	330,000	○○○○○ 산업	○○면
○○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의자 구입	2018-12-24 (2018-12-26)	228,800	228,800	○○○○○ 산업	○○면
○○, ○○○ 탕비실 썬크대 및 수납장 제작 구입 설치	2019-02-11 (2019-02-19)	5,610,000	5,610,000	○○○○○ 산업	○○과
○○○○○○관 캐비닛 수선 및 제작 설치	2019-03-06 (2019-03-14)	9,080,000	9,080,000	○○○○○ 산업	○○과
○○면 청사 캐비닛 제작설치	2019-03-10 (2019-03-22)	990,000	990,000	○○○○○ 산업	○○면
○○휴게소(상) 로컬푸드매장 진열장 제작 구입	2019-03-15 (2019-04-04)	17,919,000	17,919,000	○○○○○ 산업	○○○○과

계약명	계약일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자	발주처
캐비닛 문·잠금장치 설치	2019-03-19 (2019-04-08)	150,000	150,000	○○○○○ 산업	○○○○과
2019년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수강용 탁자 외2종)	2019-05-02 (2019-05-15)	4,960,000	4,960,000	○○○○○ 산업	○○면
청사 사무용 가구 수리수선	2019-06-02 (2019-06-14)	2,701,000	2,701,000	○○○○○ 산업	○○읍
○○○ 로컬푸드 매장 및 ○○○○ 관광안내소 집기류 제작 구입	2019-06-18 (2019-06-26)	17,523,000	17,523,000	○○○○○ 산업	○○○○과
사무용 직원의자 구입 및 비치	2019-08-10 (2019-08-20)	480,000	480,000	○○○○○ 산업	○○○○과
선반장 구입	2019-08-19 (2019-08-30)	120,000	120,000	○○○○○ 산업	○○○○과
○○○○회관 1층 안내데스크 구입설치	2019-09-01 (2019-09-11)	5,674,000	5,674,000	○○○○○ 산업	○○○ ○○소
함양군 로컬푸드 진열대 제작 구입	2019-09-10 (2019-09-19)	16,928,640	16,928,640	○○○○○ 산업	○○○ ○○과
○○○○체험학습장 비품구입	2019-11-04 (2019-11-14)	4,750,000	4,750,000	○○○○○ 산업	○○○○과
책상서랍 및 수납장 수리비 지급	2019-11-10 (2019-11-21)	200,000	200,000	○○○○○ 산업	○○면
회의용 의자 수리	2019-11-12 (2019-11-25)	50,000	50,000	○○○○○ 산업	○○○○과
○○○○센터 운영용품 구입	2019-11-26 (2019-11-28)	1,000,000	1,000,000	○○○○○ 산업	○○면
○○○○회관 1층 로비 쉼터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2019-12-03 (2019-12-23)	3,492,000	3,492,000	○○○○○ 산업	○○○ ○○소
○○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물품 구입	2019-12-06 (2019-12-30)	2440000	2440000	○○○○○ 산업	○○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강용 탁자 및 의자 구입	2019-12-20 (2019-12-31)	640,000	640,000	○○○○○ 산업	○○면
○○실 안내데스크 수선	2020-02-12 (2020-02-21)	200,000	200,000	○○○○○ 산업	○○○○과
2019년 ○○전문예방 전환대 등 사무실 탁자 제작 구입	2020-02-15 (2020-02-26)	8,977,500	8,977,500	○○○○○ 산업	○○○○과
사무실 운영 물품(파티션) 구입	2020-02-20 (2020-03-02)	794,400	794,400	○○○○○ 산업	○○○○과
사무실 캐비닛 수리·수선	2020-03-07 (2020-03-18)	220,000	220,000	○○○○○ 산업	○○읍
○○면 청사 캐비닛 제작설치	2020-03-10 (2020-03-18)	1,650,000	1,650,000	○○○○○ 산업	○○면
○○캠핑랜드 선반 제작 설치	2020-04-01 (2020-04-24)	17,910,000	17,910,000	○○○○○ 산업	○○○○과

계약명	계약일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자	발주처
관급자재(○○마을회관 다용도실 증축공사-쌍크대)	2020-04-07 (2020-06-05)	6,050,000	6,050,000	○○○○○ 산업	○○읍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2020-05-10 (2020-05-22)	320,000	320,000	○○○○○ 산업	○○읍
○○실 책장 제작 설치	2020-06-01 (2020-06-16)	583,000	583,000	○○○○○ 산업	○○과
○○○○○장 안내데스크 제작설치공사	2020-06-03 (2020-06-23)	2,352,000	2,352,000	○○○○○ 산업	○○○○○과
○○○○○장 기계실 관리비품 구입	2020-06-16 (2020-06-26)	580,000	580,000	○○○○○ 산업	○○○○○과
○○ 가구 부품 구입 교체	2020-06-20 (2020-06-30)	550,000	550,000	○○○○○ 산업	○○과
사무실 내 캐비닛 제작	2020-06-22 (2020-07-02)	150,000	150,000	○○○○○ 산업	○○○○ ○○관
○○○실 책장 제작 설치	2020-07-03 (2020-07-13)	583,000	583,000	○○○○○ 산업	○○과
사무실 운영 물품(파티션)구입	2020-07-05 (2020-07-15)	264,000	264,000	○○○○○ 산업	○○○○○과
○○짚라인 탑승장비 보관함 구입	2020-08-02 (2020-08-25)	7,980,000	7,980,000	○○○○○ 산업	○○○○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캐비닛 구입	2020-08-03 (2020-08-28)	500,000	500,000	○○○○○ 산업	○○○○○과
○○ 로컬푸드 판매장 매대제작 구입	2020-08-21 (2020-09-03)	17,820,000	17,820,000	○○○○○ 산업	○○○○○과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마을회관 건담공사-쌍크대산발장)	2020-11-02 (2020-11-20)	2,698,990	2,698,990	○○○○○ 산업	○○읍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마을회관 건담공사-쌍크대산발장)	2020-11-05 (2020-11-20)	1,591,010	1,591,010	○○○○○ 산업	○○읍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의자 구입	2020-12-03 (2020-12-11)	611,000	611,000	○○○○○ 산업	○○면
○○○○○과 캐비닛 제작 설치	2020-12-04 (2020-12-14)	1,530,000	1,530,000	○○○○○ 산업	○○과
○○스카이랜드 분실물 보관함 구입	2020-12-02 (2020-12-22)	1,000,000	1,000,000	○○○○○ 산업	○○○○과
○○○○○○○실 원탁 테이블 및 회의용 의자 구입	2020-12-04 (2020-12-24)	950,000	950,000	○○○○○ 산업	○○○○과
사무용 의자 수리 부품 구입	2020-12-18 (2020-12-28)	480,000	480,000	○○○○○ 산업	○○○○과

[출처 : 2018년 8월 ~ 2020년 12월 직무관련 거래신고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전수조사 확인 결과]

관계기관 의견

함양군 ○○○○○○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 하였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공직내부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신분·직무상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부패 방지 노력을 다하지 못한 **실무책임자 ○○○○○○관(현 ○○○○○○소) 지방○○주사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라 담당직원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철저히 사전 신고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산지일시사용신고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파)

조 치 기 관 함양군(○○○○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파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산나물, 약초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및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공익용산지에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산지 등이 지정되어 있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법률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행위제한 등을 검토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양군 ○○○면, ○○○면, ○○○면 일부 지역(546필지)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⁹⁾)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및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함양군 ○○○○파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 3. 1., 2019. 9. 7., 2019. 11. 11.,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인 ○○○면 ○○○리 산21, ○○○면 ○○○리 산21-1, ○○○면 ○○○리 산54, ○○○면 ○○○리 산104, ○○○면 ○○○리 산27의 산지일시사용 신고 4건에 대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아닌 “작업로”를 포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9) 가.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나. 완충구역 :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표 1】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지일시사용 신고 처리 내역

신청인	산림소재지(백두대간 보호필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내역		
	지번	지적(m²)	편입(m²)	목적	일자	기간
○○○	○○면 ○○리 산21외 2 - ○○면 ○○리 산21 - ○○면 ○○리 산21-1 - ○○면 ○○리 산54	66,699	3,284	임산물재배단지조성 (관리사, 울타리, 작업로, 관정)	2019.3.1.	2019.3.1.~ 2022.1.31.
○○○	○○면 ○○리 산104외 2 - ○○면 ○○리 산104 - ○○면 ○○리 산127 - ○○면 ○○리 산58-5	150,224	3,660	임산물재배단지조성 (관리사, 울타리, 작업로, 관정)	2019.3.1.	2019.3.1.~ 2022.01.31.
○○○	○○면 ○○리 산27	184,264	9,520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울타리, 작업로, 관리사)	2020.9.7.	2020.9.9.~ 2023.8.31.
○○○	○○면 ○○리 산21외 1 - ○○면 ○○리 산21 - ○○면 ○○리 산21-1	65,307	1,830	작업로 개설	2020.11.11.	2020.11.11.~ 2023.10.31.

출처)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 11. 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3호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중략
⑩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¹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 :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 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작업장, 4. 지질·토양의 조사·탐사 시설, 4.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운반 시설

관계기관 의견

함양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지전용 사무처리, 산지전용 민원상담 및 현장관리 등 업무과중 및 비교적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향후에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주사 ○○○(현 ○○○○과)과 실무담당자 지방○○주사 ○○○(현 ○○○○과)**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편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함양군 ○○○○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 신고·허가(협의)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고】 2018~2019년 산림소득증대사업(공모) 시행 지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산림소득증대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파)

조 치 기 관 함양군(○○○○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파에서는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득증대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에 의거 2018~2019년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소득증대사업’¹²⁾은 공고문에 의거 사업 전년도 6월 경 함양군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과 관련한 검토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 심의회를 거쳐 12월 경 산림청 예산 확정 후 당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자는 지원요건, 자본금 내역 및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양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함양군에서는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지원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2) 산림청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서 함양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보조 60%, 자부담 40%) 및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보조 80%, 자부담 20%)을 추진함

1.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40	20	-	40	(약용·약초류)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노지재배) 1억원~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40	40	-	20	숲가꾸기사업,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모노레일, 관리사 등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1억원~5억원 이내(2~3년간 분할지원)

2. 공통사항(사업부지 요건)

구분	2018년	2019년
지원요건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단, 개인, 법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사후관리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3. 추진절차

- 전년도 6월 : 사업신청서 제출(임업인, 생산자단체)
- 전년도 7월 : 사업계획 검토 및 도에 신청서(기본요건점검표) 제출(시·군)
- 전년도 8월 : 심의회 개최, 사업 우선순위선정 및 서류 보완 요구(도→시·군), 예산 요구(도→산림청)
- 전년도 9월 : 예산 가내시(산림청→도)
- 전년도 12월 : 예산 확정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산림청→도)
- 당해년도 1월 ~ :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최종 사업 시행(시·군)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양군 ○○○○과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시설물 또는 5년 이상의 사후관리기간을 두어야하는 중요시설물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면서,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철거 확약 및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조치 없이 단순히 ‘산양삼 재배’로 균유지를 대부계약한 ○○영농조합법인(○○○), ○○○, ○○○,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 ○○○, ○○○, ○○○, ○○○, ○○○을 근저당권 설정 해제 등의 조치 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해당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물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 중요재산으로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 이상 사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영구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여 설치 할 수 있음에도,

함양군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기존의 균유지 대부계약 조건인 ‘산양삼(산약초) 재배’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 대부계약기간 갱신 이외의 별도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해제하여야 하는 부지에는 지상권자(함양군 ○○○○)의 동의서만을 징구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8~2019년 사업 중 부지확보 부적정 대상자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역		사업대상지	부지확보 내역	
	대상자	지원자격	세부사업명	상세 추진 내역		소유자	사업부지 상태
2018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저온저장고 등	○○면 ○○리 산10-1	함양군수	대부계약
2018	○○○	임업후계자		관리사, 관수, 산양삼 구입 등	○○면 ○○리 산10-1	함양군수	대부계약
2018	○○○	독림가		울타리, 표고목, 관정, 관수, 관리자, 산양삼구입 등	○○면 ○○리 산44-9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2018	○○○	임업후계자		울타리, 표고목, 관정, 관수, 모노레일 등	○○면 ○○리 산110-3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2019	○○○	임업후계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등	○○면 ○○리 산19	함양군수	대부계약
2019	○○○	임업후계자		모노레일, 울타리, 저온저장고 등	○○면 ○○리 산121	함양군수	대부계약
2019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산양삼 구입 등	○○면 ○○리 산100	함양군수	대부계약
2019	○○○	독림가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저온저장고, 산마늘 구입 등	○○면 ○○리 산104 외 2필지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2019	○○○	독림가		작업로, 건조창고, 관리자, 산마늘 구입 등	○○면 ○○리 산187-1 외 1필지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2019	○○○	독림가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등	작업로, 울타리, 관리자 등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2019	○○○	독림가		작업로, 산양삼 구입 등	○○면 ○○리 산117	○○○, ○○○	함양군○○○○○근저당권 설정

【표 2】 2018~2019년 사업 중 균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계약 현황

사업대상자 (사업연도)	사업대상 부지 (토지면적㎡)	균유재산 대부현황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목적	사용기간
○○영농조합법인(○○○), ○○○(2018)	○○면 ○○리 산10-1 (1,066,939㎡)	○○영농조합법인(○○○)	50,000	산양삼 재배	2019.1.1.~2023.12.31. (2013.12.10.~2018.12.31.)
		○○영농조합법인 ○○○	50,000	산양삼 재배	2020.1.1.~2024.12.31. (2015.12.1.~2019.12.31.)
○○○(2019)	○○면 ○○리 산19 (454,381㎡)	○○○○○○○ 약초작목반 ○○○	50,000	산양삼, 산약초 재배	2017.1.1.~2021.12.31.
○○○(2019)	○○면 ○○리 산121 (193,388㎡)	○○○ 약초작목반 ○○○	50,000	산양삼 재배	2019.1.1.~2023.12.31.
○○영농조합법인(○○○)(2019)	○○면 ○○리 산100 (829,031㎡)	○○영농조합법인(○○○)	50,000	산양삼 재배	2021.1.1.~2025.12.31. (2016.11.1.~2020.12.31.)

출처)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당시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함양군의 검토를 거쳐 제출된 2018년 사업신청서에 대해, 경남도 심의회에서는 사업신청자 중 ‘○○영농조합법인(○○○)과 ○○○’의 사업부지는 공유지 대부자(함양군수)와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은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착수 전까지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년에도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등 대부계약을 변경하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등기시설물 설치’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함양군에 보완 요구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함양군 ○○○○과에서는 2018년~2019년 공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한 ○○영농조합법인 등 5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 또는 시설물 철거를 조건으로 하거나, 철거 비용을 예치하는 것으로 공유지 대부계약서를 변경하였어야 했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 등 6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게 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적절치 않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해당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이 사안에 대하여 함양군에서는 ‘등기 비대상 시설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지상권자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사후관리 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영구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산양삼 재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공유재산 대부 목적에 타당하다는 실무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법규와 사업지침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2018년, 2019년 산림소득 증대 보조사업 지원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보완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부적합한 사업대상자에게도 보조사업을 지원한 **지방○○주사 ○○○(현 공로연수), 지방○○주사 ○○○(현 ○○○○과)**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요건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3조 내지 제55조(벌칙)에 따라 시장·군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 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등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및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장·군수는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담당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산림보호단속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산림의 피해 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

호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담당자가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순찰시 불법산지전용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는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산지 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여야 하며, 벌칙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8. 7. 3.부터 2020. 12. 23. 기간중 ○○○○○과로부터 통보된 ‘불법산지전용지 처분 의뢰’ 공문에 의거 ○○읍 ○○리 산○○-18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공소시효¹³⁾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면 ○○리 산○○-18번지 등 10건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복구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 2021년 2월 현재까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사건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체 방문 접수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불법 산지전용 64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¹⁴⁾하였으나, 복구 면제, 양성화 완료 및 복구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고, 44건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훼손 산지가 방치된 사실이 있다.

또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과에서는 계획 수립을 통한 정기적인 단속 추진 사실이 없고, 도별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 등의 불법사항 발견에 따른 [별지1] 서식에 의한 산림사고대장 기록·관리, [별지2] 서식에 의

13) 공소시효 : 5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 반기별 피해상황 보고 및 [별지3] 서식에 따른 산림피해 상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훼손면적 산정 등 불법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자료가 없으며, ○○면 ○○리 산93번지 평탄작업 외 다수 불법산지전용 사건이 「산지관리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벌칙)에 따른 공소 시효(5년)를 넘겨 적절한 사법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산림보호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다.

【표1】 불법산지전용지 처분 의뢰사항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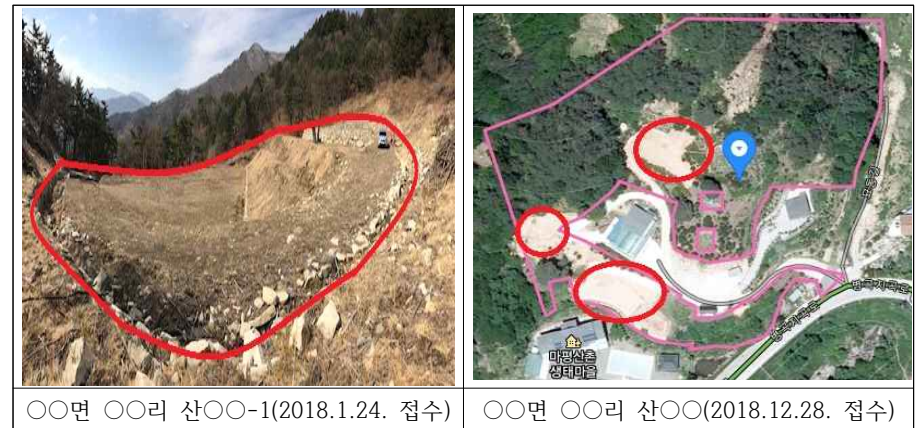
연번	처분 의뢰일	대상산지	불법 훼손자	불법사항		조치내역 (고발 및 사건송치)
				면적(㎡)	위반내역	
1	2018.07.03.	○○읍 ○○리 산○○-18	○○○	5,405	발조성	2020. 8. 19. (기소 송치)
2	2018.04.18.	○○면 ○○리 산○○○	○○○	2,066	인삼재배	불구속(각하)
3	2018.09.12.	○○면 ○○리 산○○-18, 산○○-5	○○○	1,186	평탄작업	
4	2018.10.04.	○○면 ○○리 산○○-12	○○○	481(1본)	벌채	
5	2018.12.28.	○○면 ○○리 산○○	○○○	936	평탄작업	
6	2019.01.22.	○○읍 ○○리 ○○○○	○○○	1,260	건물	2019. 3. 2. (공소권 없음)
7	2019.02.27.	○○면 ○○리 산○○-1	○○○	849	축대설치	
8	2019.03.19.	○○면 ○○리 산○○	○○○	측량필요	평탄작업	2020. 5. 13. (기소 송치)
9	2019.03.28.	○○면 ○○리 산○○-2	○○○	측량필요	평탄작업	
10	2019.04.04.	○○면 ○○리 산○○-2	○○○	1,652	평탄작업	
11	2019.11.08.	○○면 ○○리 산○○-1	○○○외1	245	축사건립	
12	2019.12.03.	○○면 ○○리 산○○-4	○○○	측량필요	발조성	
13	2020.03.27.	○○읍 ○○리 산○○-18	○○○	측량필요	발조성	2020. 8. 19. (기소 송치)
14	2020.03.16.	○○면 ○○리 산○○	○○○	3,160	축사건립 (양성화)	2020. 6. 23. (공소권 없음)
15	2020.03.16.	○○면 ○○리 산○○-9	○○○	142	축사건립	
16	2020.03.16.	○○읍 ○○리 ○○-19	○○○	449	축사건립 (양성화)	2020. 6. 23. (공소권 없음)
17	2020.05.19.	○○면 ○○리 산○○○-6, ○○○	○○○	측량필요	축대설치	2020. 9. 12. (기소 송치)
18	2020.12.23.	○○읍 ○○리 외 1개소	○○○,○○○	측량필요	고령토채취 및 산림훼손	

【표2】 자체(○○○○담당) 접수사건 처리현황(2018. 1. 24. ~ 2021. 2. 25.)

구분	접수건수	훼손내역	조치내역			미복구 (양성화제외)
			검찰 송치		해결불요 및 처리중	
			기소	불기소		
계	64		25	19	20	44
2018년	18	벌채 2건 건축 및 진입로 4건 기타 12건	8	10	-	8
2019년	16	벌채 1건 건축 및 진입로 4건 기타 11건	4	4	8	10
2020년	24	벌채 5건 건축 및 진입로 5건 기타 14건	13	5	6	21
2021년	6	벌채 2건 발조성 등 4건	-	-	6	5

※ 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훼손되어 미복구된 불법산지전용지】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최근 산지불법훼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현재 인원으로는 수시로 산림보호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체계적인 사법 처리를 위하여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불법산지전용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산림보호 단속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지방○○주사보 ○○○(현 ○○○○과)와 실무책임자 지방○○주사 ○○○(현 ○○○○과)**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미처리된 불법산지전용 신고 건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한 복구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추진으로 산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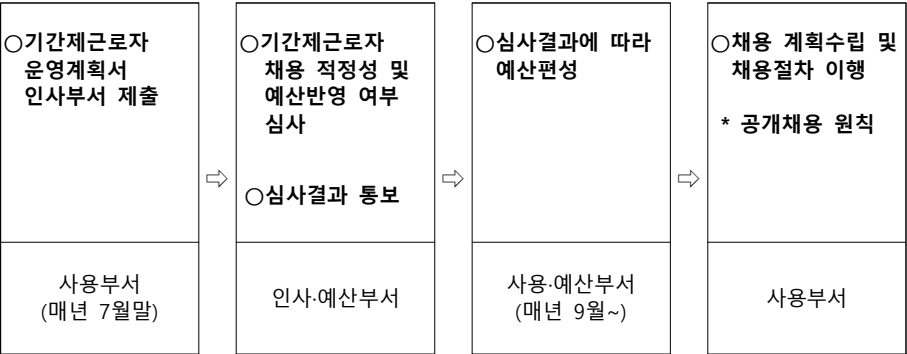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과, ○○○○○○소)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과, ○○○○○○소)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공무원 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은 절차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표1】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출처) 함양군 제출 자료 재구성

2.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점수 산정 및 합격순위 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함양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이나 면접전형 및 서류전형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양군 ○○○○과에서 2020. 12. 15.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수립한 ‘○○○○업무 사무보조 채용 면접 계획’(○○○○과-○○○○○)에서는 채용방법을 서류 50%, 면접 50%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0. 12. 1. ‘2021년도 함양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함양군 공고 제2020-1684호)에 따르면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함양군 ○○○○과에서 ○○발급업무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결정을 위한 평가점수 산정과 합격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서류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황(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양군 ○○○○과에서는 2020. 12. 15. 수립¹⁵⁾한 ‘○○발급업무 사무보조 채용 면접 계획’(○○○○과-○○○○○)에서 정한 채용방법(서류50%, 면접50%)에 따라‘서류점수’와 ‘면접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각각 50%씩 반영하지 않고, 2020. 12. 17. **【표2-1】**과 같이 ‘서류점수’와 ‘면접위원 3명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¹⁶⁾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류 25%, 면접 75%를 반영하여 합격순위를 결정하였다.

15) (기안) 주무관 ○○○ - (검토) ○○○○담당 ○○○ - (검토) ○○○○과장 ○○○ - (전결) ○○국장 ○○○

16) 당초 채용면접 계획을 정한 ○○○○담당 등 평가위원 3명이 서명함

이에 따라 2020. 12. 18. ○○국장에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과를 보고¹⁷⁾(○○○○과-○○○○○)하였고, 면접점수를 75% 반영한 총점수 순으로 1순위인 ○○○과 2순위인 ○○○이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21. 1. 26. 3순위인 ○○○을 채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2-2】**와 같이 감사기간 중 정당하게 서류 50%, 면접 50%로 산정하여 합격순위를 결정한 결과, 3순위로 채용된 ○○○은 5순위가 되어 채용될 수 없었고, ○○○이 4순위에서 2순위로 되는 등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1】 ○○발급보조 채용 시험 평정 및 채점표

출처) 함양군 제출 자료

17) (기안) 주무관 ○○○ - (검토) ○○○○담당 ○○○ - (검토) ○○○○과장 ○○○ - (전결) ○○국장 ○○○

【표2-2】 ○○발급보조 기간제근로자 합격순위 부적정 현황

응시 번호	응시자 성명	서류 평정 ①	면접평정				총합계		합격순위	
			A 위원 ②	B 위원 ③	C 위원 ④	평균⑤ =(②+③+④)/3	기재 ①+② +③+④	정당 ①+⑤	기재	정당
1	○○○	25	15	35	24	24.7	99	49.7	6	6
2	○○○	25	26	42	32	33.3	125	58.3	2	3
3	○○○	35	15	35	22	24	107	59	4	2
4	○○○	20	15	35	24	24.7	94	44.7	7	7
5	○○○	25	23	37	30	30	115	55	3	5
6	○○○	23	40	47	40	42.3	150	65.3	1	1
7	○○○	30	20	32	24	25.3	106	55.3	5	4

출처) 함양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함양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 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사용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함양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을 반드시 7일 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양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표3】와 같이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

연번	연도	부서명	채용목적	채용기간	합격자
합계			-	-	30명
1	2018	○○과	○○○○○○조사 보조요원	2018. 11. 1. ~ 2018. 12. 31.	○○○ 외 9명
2	2018	○○○○ ○○소	○○○○○○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8. 9. 10. ~ 2018. 9. 21. 2018. 10. 1. ~ 2018. 12. 31.	○○○
3	2019	○○과	○○○ ○○○○○○조사 업무보조	2019. 5. 2. ~ 2019. 12. 31.	○○○
4	2019	○○과	○○○○○○조사 보조요원	2019. 11. 1. ~ 2020. 2. 29.	○○○ 외 7명
5	2020	○○과	○○○○○○조사 보조요원	2020. 11. 12. ~ 2021. 2. 28.	○○○ 외 9명

출처) 함양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점수 산정 및 합격순위 결정 부적정

함양군에서는 연말 예산·회계업무, ○○시책업무, 군의회 정례회의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 업무가 과다했고, ○○○○과의 업무 특성상 민원응대로 바쁜 동료 직원의 업무까지 도와주는 과정에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계산 착오로 최종점수에 오류가 있었으며, 특정한 채용을 위하여 고의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채용의 기회가 상실된 ○○○에 대해서는 본인이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하반기 ○○○○과 내 기간제근로자 모집 시 우선 채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추후 이와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1순위자(○○○)와 2순위자(○○○)가 채용을 포기함 따라 3순위자(○○○)를 채용한 정황으로 볼 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고의를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채용의 최종점수를 산정하는 일은 서류50%, 면접 50%의 방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순 계산임에도 합격 당락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실로 판단되며,

근로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최종점수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주의의무를 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예산·회계업무, ○○시책업무, 군의회 정례회의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 업무가 과다하여 계산 착오로 최종점수에 오류가 있었다는 함양군의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실시

함양군에서는 ○○○○○○조사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각 읍면의 지리와 건축물 신증축 현황을 잘 알고, 건축물 구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이 같은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고를 통해 채용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하고 공고 절차를 생략하였고, ○○○○ ○○감면조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도 ○○○ ○○업무 일제조사 실시에 맞춰 채용공고를 하지 못해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고를 생략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와 ○○○○○○조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고, 그 조사를 위한 보조인력 수요 시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공고문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긴급한 사유라는 함양군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며,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긴급한 사유나 특수한 사정으로 검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채용 추진 시 처음부터 공고 절차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상남도 관내 일부 지자체에서 다년간 채용 공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조사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함양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수행 중 평가위원별 채점표를 합산하고 최종점수 산정과 합격순위 결정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양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최종점수 산정을 잘못하고 합격자 당락의 변동을 초래한 **실무 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채용시험 평정 및 채점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최종 서명하여 합격순위를 확정함으로써, 합격자 당락의 변동을 초래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주사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함양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채용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또한 최종점수 산정과 합격순위 결정을 잘못하여 채용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당초 계획에서 정한 채용방법과 다르게 최종점수 산정과 합격순위를 결정하여 합격자의 당락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긴급한 사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반드시 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000000체험장 위탁 관리·운영 소홀

소 관 기 관 00군(0000과)

조 치 기 관 00군(00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00과에서는 2013년~2018년 동안 0000체험장을 조성하여 「00군 0000체험장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9. 00. 00. 0000체험 전문기관으로 000(대표 : 000)을 고시하고 관리·위탁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000000체험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표1】 000000체험장 시설 현황

구분	소재지	사업기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면적	시설물
행정 재산	00면 00리 468-8	2000년 ~2000년	0,000	건물 : 000㎡ 야외 : 0,000㎡ (부지 00,000㎡)	· 0000체험장 - 전시 및 홍보관 제재소, 체험장, 판매장 등 · 야외모형시설 - 질라인, 타워슬라이드 미니어처마을 등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위탁운영사항 공고 미이행, 군 승인 없이 전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0000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0000체험장을 위탁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0000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군 0000체험장 운영 조례」 제26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체험장의 운영 권한과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¹⁸⁾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000000체험장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제7조에서도 수탁자는 00군의 승인 없이 수탁·관리하는 000000체험장(건물, 장비, 설비 및 집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재위탁 할 수 없고, 제27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체험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00군 0000체험장 운영 조례」 제28조 제1항에 수탁기관은 체험장의 운영 상황을 반기 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4항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00군수는 000000체험장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는 전문기관으로 고시하고 그 위탁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 받거나 조사 검사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관련 조례와 협약서 등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에서는 아래 【표2】 과 같이 2019. 5. 9. 000(대표 : 000)을 0000체험 전문기관으로 고시하고 2019. 12. 26.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탁하는 법인·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지 않았으며,

또한 000000체험장 홈페이지, 2020년 결산서 등 사업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탁자(000 대표 000)가 00군의 승인 없이 000000으로 고시되지 않은 000(대표 : 000)에게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00군 승인없이 전대 운영 현황

시설	고시내용	고시일 (위탁일)	수탁자 (계약방법)	실제운영자	부적정 현황
00 0000 체험장	0000체험 전문기관 고시	2000. 0. 0. (2000.00.00.)	000 (대표 : 000) 00-00-00000 수의계약	000 (대표 : 000) 000-00-00000	00군 승인없이 000로 운영함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정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미가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와 기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000000체험장 위수탁 협약서 제7조에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00군 소유의 000000체험장은 2020년 기준 재산가액 00억 원의 중요재산으로 화재 등에 따른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00군이 직접 화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용허가자(수탁자)에게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전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 계약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행정안전부-공기업과-1518('13.3.21)호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에서는 2016. 6. 27. 000000체험장을 준공한 이후 ~ 2020년 까지 화재보험을 직접 가입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00군 00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000 000 대표 000과 000 대표 000는 부자관계이고 000이 체험장의 운영자와 강사로 일하고 있어 수탁자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00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8조, 「00군 0000체험장 운영 조례」 제32조 등을 위반하여 2020년 000000체험장을 00군 승인 없이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관리·위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 실무책임자 0000과 지방0000(현, 00000과) 000**에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고,(**훈계**)
- ② 아울러 00전문기관인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0000체험장이 관리·위탁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운영상황을 조사·검사하고, 관련법령 연찬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000000마을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처리 부적절

소 관 기 관 00군(0000과, 00과)

조 치 기 관 00군(0000과, 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과에서는 0000과의 수의계약 요청으로 000000회 000000본부와(이하 ‘000000회’이라 한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표1】와 같이 총 2건(총액 000,000천 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1인 건적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표1】 000000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용역비		과업내용	과업기간	계약방법 (업체명)
	당초	변경			
00 000000마을 00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00,000	00,000	조성면적 : 10만㎡ - 기본계획 1식 - 실시설계 1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18.5.8 ~ 12.20	1인 건적 수의계약 (000000회 000000본부)
000 000000마을 00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00,000	00,000	조성면적 : 10만㎡ - 기본계획 1식 - 실시설계 1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19.4.15 ~12.20	1인 건적 수의계약 (000000회 000000본부)

자료(출처) : 00군 감사자료 재구성

2. 과업 수행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청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을 후 지체없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0군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에서는 000000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00과에 수의계약 요청하면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000000회가 본 용역 과업에 포함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업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지 않아 과업수행 자격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00군 00과에서도 본 용역을 000000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000000회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¹⁹⁾만 제출 받고, 000000회가 본 용역 수행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00군 00과는 【표1】 “000000회와 수의계약한 현황”과 같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000000회와 총 2건(총액 158,751천 원)의 용역을 수의계약하게 되었고,

000000회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입찰 참가 자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000000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자격 요건

과업내용	용역수행 자격요건	000000회 000000본부
- 기본계획 1식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조경, 수자원개발)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등록
- 실시설계 1식 (실시설계,측량)		등록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1식		미등록

자료(출처) : 00군 감사자료 재구성

19) 000000회 000000본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3.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용역 항목을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00군수는 본 용역이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 받고는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있다면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에서는 본 용역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표3】와 같이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설계변경하여 삭제하지 않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고도 계약이행내용에 대해 면밀한 확인·검토 없

이 용역 완성검사를 처리하여 수행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16,167천원을 000000회에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3】 00 000000마을 조성사업 개발사업 부지면적 현황

(단위 : m²)

당초	변경	감	사유
전체 : 10만m ² - 방문자센터 1,174m ² - 000000센터, 00체험관, 000000000전시장, 이동식화장실 2,039m ² - 00터널 39,346m ² , 00골목 2,300m ² - 등산로 55,141m ²	방문자센터 852m ²	99,148m ²	기 조성된 공원부지 활용으로 개발사업 부지면적 축소

자료(출처) : 00군 감사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00군에서는 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 대상여부 및 과업수행 자격 유무, 수의계약 배제대상 해당 여부 등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용역 수행 부적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과업내용 변경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지급하게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0000과 지방00000 000**에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훈계**)

②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지 않고 지급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00,000천 원은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

③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000000회 000000본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각종 체육대회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00군(0000과)

조 치 기 관 00군(00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00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00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체육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교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편성된 민간행사보조금은 당초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정당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전 0000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000골프대회를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전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당한 보조사업자(00군00회)에게 교부 결정하지 않고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0000골프회 등 11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1】 0000 예산재배정 교부현황

(단위:천원)

연도	보조금액	보조사업자(심의)	보조금 교부	비고
2018년	00,000	00군00회	000000회	
2019년	00,000			
2020년	00,000			

출처)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를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교부 결정을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수익금과 수익 산출기초, 사용방법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수익금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군으로 반환하도록 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시 수익금의 발생 내역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산하여 수익금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군 0000과(전 0000과)에서는 【표2】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00대회’ 등 00개 대회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대회요강에 따라 참가비 수익금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사업계획서에서 누락된 수익금 사용용도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정산검사 시에도 수익금 발생내역,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보조사업 수익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보조금 지원사업 수익발생 및 사용 현황

(단위 : 천 원)

<생략>

관계기관 의견

00군 00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정당한 보조사업자인 00군체육회 주최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익금과 자부담 개념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수익금에 대한 검토 없이 교부 결정하였으며, 정산 시 교부 조건에 자부담 및 수익금에 대한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의견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지방재정법」, 「00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0000과 (행위시 00000과) 지방0000 000(현 00읍)과 0000과 000**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훈계)**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0000 ##### 진출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000(0000, 00000)
조 치 기 관 000(0000, 00000)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0 0000에서 추진 한 「0000 인프라구축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2019. 11.19. 000 소재 0000(주) 대표 000과 도금액 399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1. 25. 착공하고 2020. 9. 9. 준공 한 사업이다.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금	관급			
0000 인프라구축 진출입로 개설공사	00 00	도로개설 L=200m	564	462	102	'19.11.25. ~ '20.9.9.	0000(주) 대표 000	100%

2.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본시설)에 따른 기본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도로)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제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했어야 했다.

- 88 -

경허가 신청 하였으며,

○○○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변경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실무 종합심의회 과정에서 관련 법령 적용 잘못으로 규모(###m²) 이하인 경우에 적용해야 할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행위제한 된 제조업을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허가(협의)를 해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불가한 제조업을 설치 가능한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승인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위법사항 해소를 위하여 용도변경(제조업→사무소) 중에 있어 빠른시일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군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 개최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① ○○○○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진입도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미이행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미이행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현 ○○○○○)과 실무 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현 ○○○○○과), ##### ○○○○ ○○○○○○○ ○○○(현 ○○○○○),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을 건축허가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현 ○○○○), ○○○○○○○ ○○○(현 ○○○○○)과 실무책임자 이면서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현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제91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같은 법 제71조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취소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3년부터 ○○생태, ○○, ○○,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 ○○ 자원과 ○○○○ 기능의 통합을 위해 2021년까지 270억 원(국비 @@@@, 도비 @@@ 군비 @@@)의 예산을 확보하여 [표 1]과 같이 ○○○○○○○○○○○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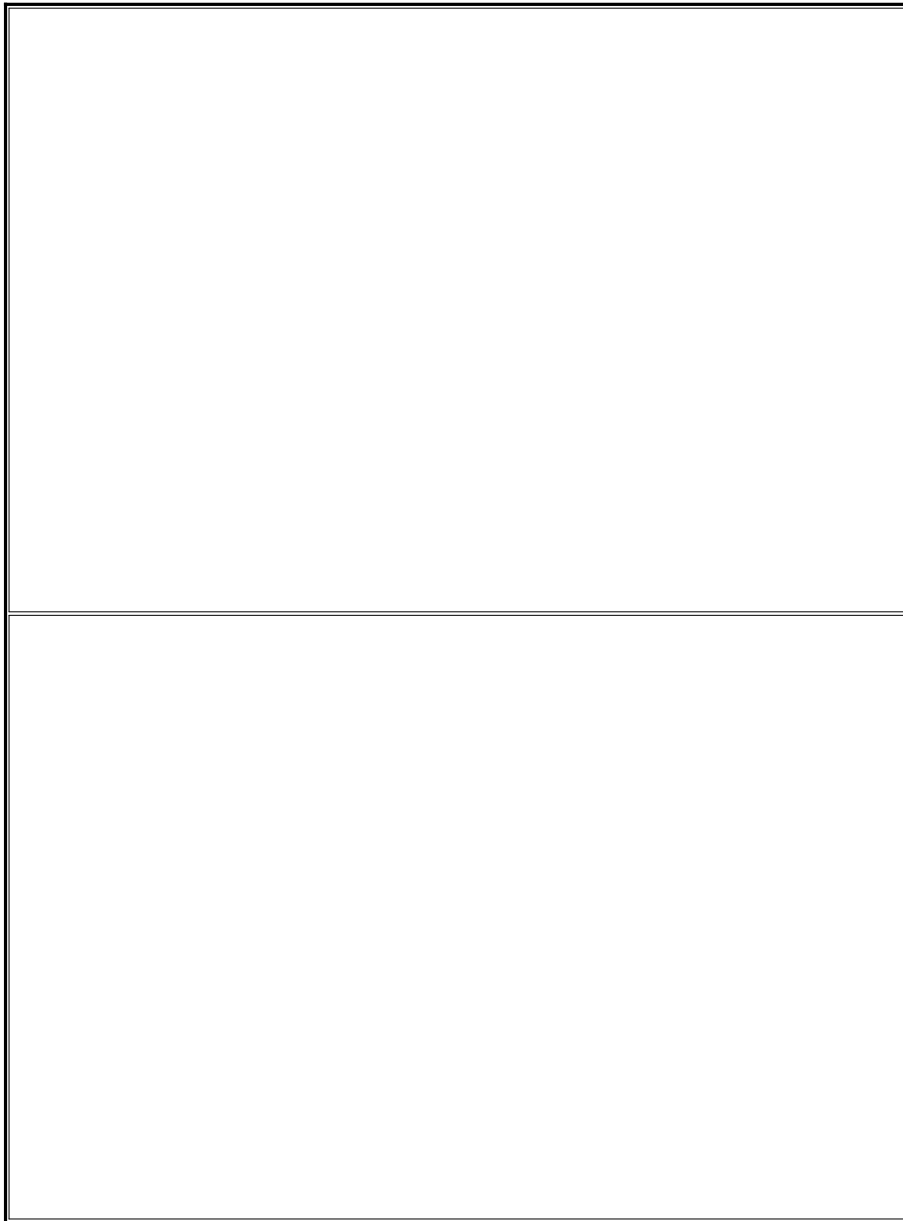
[표 1] ○○○○○○○○○○○ 조성계획 【도 ○○○○○-8868호(2017.4.20.)】

구분	시설물명	단위	수량	형질변경 (㎡)	건축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총 계							
숙박 시설		동	15				
편의 시설		식	1				
위생 시설		식	1				
체험 교육 시설		식	1				
체육 시설		식	1				
전기·통신시설 등 기타		식	1				

[표 2]와 같이 2013. 7. 1. ○○○○○○○○○○○(진입도로, 건축, 토목, 조경 등)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공사는 진입로 정비공사 ○○○○○○(주) 대표 ○○○ 외 8건에 27,000백만 원을 계약하여 진입로 조성공사, 기반조성공사 등 8건으로 각각 분할하여 ○○○○○○○○○○○ 조성사업 전체공사를 2020년말 준공하였고, 추가공사를 위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다.

[표 2] ○○○○○○○○○○○ 조성사업 발주 내역

구 분		사업 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백만원)		시 공 사	대표	입찰 방법
				최 초	준 공			
계				27,000	25,59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 ○○○○○○○○○	○○○	수의
진입로 정비공사						○○○○○○○(주)	○○○	경쟁 입찰
기반조성공사						○○○○○○○(주)	○○○	경쟁 입찰
건축 공사	건축					㈜○○○○○	○○○	경쟁 입찰
	소방					㈜○○○○○	○○○	
	전기 (옥내)					㈜○○○○○	○○○	
	전기 (옥외)					㈜○○○○○	○○○	
	통신 (옥내)					㈜○○○○○	○○○	
	통신 (옥외)					㈜○○○○○	○○○	
건축부지 조경사업						㈜○○○○○	○○○	경쟁 입찰
경관조명 설치공사						㈜○○○○○	○○○	경쟁 입찰
종합놀이시설 조성사업						㈜○○○○○	○○○	경쟁 입찰
건축부지 조성사업						㈜○○○○○	○○○	경쟁 입찰
종합놀이시설 주변 정비공사						㈜○○○○○	○○○	수의



2. ○○○○○○○○○ 조성사업 분할계약금지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총칙-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나.에서는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총칙-5. 분할계약의 금지-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분할계약의 금지-라.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성계획에 따라 2015.12.14. 완료 하였으나, ○○○○○○○○○ 조성사업의 전체 실시설계용역에서 반영된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실시설계용역 이전인 2014.5.21. 착공하고, 기반 조성공사도 2015.5.28. 착공하는 등 사업을 분할 발주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진입도로 조성공사와 기반조성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의 설계도서에 대한 완료검사와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건축공사와 건축부지 조경공사, 종합놀이시설 조성사업, 추가 건축부지 조성사업 등으로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각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숲속의 집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해당하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기술심의 대상사업 임에도 기술심의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체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전국입찰 대상사업임에도 각각 분할하여 100억 원 이하로 지역제한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3. ○○-○○시설 조성계획 변경 미 이행

가. 조성계획(변경) 내역

구분	시설 물명	규모	단위	수량	형질변경(㎡)			건축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75,202	78,740	3,538	3,194.4	3,194.4	－	
숙박시설			동	5	1,047	1,293	246	198.60	198.60	－	
			동	5	1,158	1,632	474	174.90	175.50	0.60	
			동	5	1,502	2,753	1,251	208.75	235.40	26.65	
			동	1	1,296	1,952	656	782.51	653.12	－129.39	
편의시설			km	0.5	4,132	3,772	－360				
			km	0.24	2,133	2,171	38				
			km	0.14	－	584	584				
			동	1	1,785	1,665	－120	333.00	90.00	－243.00	
			식	1	2,776	2,209	－567				
			식	1	1,558	3,072	1,514				
			개소	1	2,250	2,260	10				
			개소	1	1,508	1,519	9				
			개소	1	1,964	2,404	440				
			개소	1	480	994	514				
			개소	1	4,823	4,594	－229				
			동	1	919	3,126	2,207	400.00	382.80	－17.20	
			개소	1	716	725	9				
	위생시설			동	2				59.20	37.00	－22.20
			동	2				140.72	71.56	－69.16	
			개소	1	150	150	－				
			개소	2	204	204	－				
체육·교육			식	1	5,501	5,026	－475				
			동	1	3,922	4,511	589	896.70	462.62	－434.08	
체육시설			식	1	428	2,389	1,96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2,248	2,514	266				
			식	1	938	1,938	1,000				
			식	1	1,847	1,620	－227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보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을 말한다.

또한, 「○○○○법」 제13조(○○○○의 지정)에 따라 ○○○○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으로 지정된 ○○에 ○○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으로 지정되고 ○○○○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된 ○○시설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은 「○○○○○○○○○○ 조성사업」을 위한 ○○○○ 조성계획 변경(1차) 승인을 경상남도 ○○○○-###호(#####)호로 받아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중 승인내용과 다르게 시설물 구조 및 규모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4.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고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시행한 「진입도로(군도9호선) 정비공사」에 대하여 ###.###.###.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완료공고를 위한 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5.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는 「○○○○○○○○○○ 건축부지 조경사업과 주변 정비공사」 중 ○○○○○○○○○○○ 건축부지 조경사업 ○○○쌓기의 경우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쌓기 경비에 낙찰률(86.733%)을 적용하지 않은채 계상되어 공사비 약 #####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 주변 정비공사 ○○○쌓기의 경우는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의하면 ○○석의 실제체적률은 돌의 형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산석·강석)과 가공○○○ 모두 약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석량 산출시 체적(m³)계산은 ‘체적 = 높이 × 폭 × 길이 × 실체적률(70%)’을 적용하지 않아 약 ###천 원 상당의 과다 지급하는 등 도합 약 ###천 원 상당의 과다지급 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는 등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공사명	공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건축부지 조경사업	○○○쌓기	경비 낙찰률 적용				과다지급
주변 정비공사	○○○쌓기	실체적률 70%적용				과다지급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쌓기 실체적률 미적용 등 과다하게 지급된 약###천 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진입도로, 기반조성, 건축, 조경공사 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를 위반하고,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발주 한 잘못이 있으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심의 대상임에도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지 않고 시행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설 조성 계획 변경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현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현 ○○○ ○○○○), ○○○○○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고, ###선에 대하여 준공이후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를 미이행 하였으며, 설계도서 검토소홀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 ○과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 ○○○○○○○ ○○○, ##### ○○○○○ ○○○○○○○ ○○○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쌓기 경비 낙찰율 및 실체적률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 약 ###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 조성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변경 및 추가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고,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 추진 한 「○○○○○○○ 조성사업」은 ##### 창원시 소재 ○○○○○○(주)(대표 ○○○)와 도금액 #####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1.14. 착공하고 ##### 총괄 8회 설계변경으로 도금액 8,155백만 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 준공 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CM)업체로 선정된 (주)○○○○○○○과 (주)○○에서 공동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사업이다.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조성사업	○○ ○○		11,649	8,155	3,494	'16.11.14. ~ '20.10.8.	○○○○○○○(주) 대표 ○○○	준공 (100%)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1,359	1,359	-	'17. 5.25. ~ '20.9.30.	(주)○○○○○○○ 대표 ○○○	

2.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감독 권한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로부터 준공(기성)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공사관리관과 책임건설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적정 배치여부 및 근무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 검사 시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등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전반에 대한 시공내용을 확인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통보 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은 「○○○○○○○○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대표 ○○○)와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준공검사자는 준공검

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접수일로 14일을 경과하고도 1일을 더 지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준공검사 전에 실시하는 예비준공검사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에 준공검사자인 비상주 감리원이 실시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용역감독 공무원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내에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에서 직접 시설공사의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위한 준공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이 종료되어 준공검사 자격이 없음에도 용역기간 연장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감독 및 준공(예비준공)검사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용역정산을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용역감독관과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이 끝나도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서로 동의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편의를 제공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3.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대가의 조정)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계약 시 미리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함에도 [표 3]와 같이 신규물량 추가공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공사비 약 282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건설기술용역 대가의 조정은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 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 대가를 조정할 수 있고,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 ○○○, ○○○, ○○○ 웬스공사는 단순히 사업물량 증가이며 당초 금액보다 10% 증액이 발생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용역 변경대상이 아님에도 [표 2]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을 통하여 9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역기간 연장도 사업물량 증가를 사유로 53일을 연장해 주는 등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용역 수행업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2020.5.4.) (단위 : 백만 원)

당 초			변 경				부당증액금액		비 고
과 업 량	금 액		과 업 량	금 액					
· 〇〇〇3면, 〇〇〇,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	1,264		계	1,408	계	95	증53일	
	1차분	635		1차분	635	1차분	-		
	2차분	580		2차분	724	2차분	144		
	3차분	49		3차분	49	-	-49		

[표 3] 〇〇〇〇〇〇〇 조성사업 총괄 7회 설계변경 현황 (2020. 6.18.) (단위 : 천 원)

당 초			변 경 (2회)						부당증액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증 액				
· 〇〇〇3면, 〇〇〇,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	11,506,531		계	11,666,318	계	159,787	계	282,000	
	도급	8,038,261		도급	8,177,888	도급	139,627	도급	-	
	관급	3,468,270		관급	3,488,430	관급	20,160	관급	282,000	

※ 자료 : 〇〇〇 제출자료 재구성

4.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 제한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도록 했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〇〇〇에서는 〇〇〇〇〇〇〇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1차분)에 대하여 (주)〇〇〇〇〇〇 대표 〇〇〇으로부터 재무과로#####. 완료계가 접수되자 〇〇〇〇〇-####호(#####)로 〇〇〇〇〇〇〇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준공검사공무원을 용역감독공무원인 ##### 〇〇〇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용역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 함으로써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5. 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려면 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설사업 준공필증 등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해야 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 #####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완료공고를 위한 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6. 특수구조건축물 각 시공단계별 구조기술사 협력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에 따르면 설계자와 감리자는 같은 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1항제2호 및 제4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건축시공)제7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매 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5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의 공정에 다다른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감리(중간, 완료)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성)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顛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31 00」 4.7.8.(주각부 및 콘크리트의 지압)에서 주각부는 기둥의 하중과 모멘트를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강구조」 4.1-7 주각부 접합상세(핀주각)-일반기둥을 볼 때 베이스플레이트와 페테스탈(주각부)은 전체 길이 100mm크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 4.12.3.8. 주각부의 마감에 따르면 주각과 베이스플레이트는 내력이 기초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는 무수축 그라우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공사」를 시행하면서 ○○○ ○○○ 지붕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및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제1호에 따른 ○○○ 건축물에 해당하여 2020. 7. 17. ○○○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를 신청하였고, 2020. 7. 31. 서면심의의 방법으로 구조안전심의를 득한 사실이 있으며, 심의조건으로 기존 1층 건물 위에 세워지는 기둥 앵카볼트 매입길이 L=700mm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Membrane은 충분한 두께와 단위중량, 일정한 섬유밀도, 인장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료를 선택하고 시공 및 구조감리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일 당시 현장확인 결과 기초 주각부는 상부 ○○○의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초 주각부 상세도면과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앵커볼트가 피복두께를 적절히 확보하여 과다한 응력발생 시 콘크리트가 파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베이스플레이트 외곽 2면은 철근콘크리트 주각부가 50mm정도 더 확대되어 시공되지 않았고 무수축 모르타르로 베이스플레이트 하부를 밀실하게 시공하지도 않아,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이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은 특수구조건축물은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기초공사 및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할 때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시공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자와 함께 감리보고서에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건설사업자는 특수구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조립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문제점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

[사진1] ○○○ 주각부 시공사진

기초 주각부 상세도면	현장사진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를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①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완료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완료검사를 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준공검사를 용역 감독공무원이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조정사유가 아님에도 사업물량을 증가하여 약 ##백만 원을 부당하게 변경 시행 하였으며, ○○○○○○ 진입도로를 준공하고도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를 하지 않았고, 특수

구조건축물 각 시공단계별 구조기술사 협력을 미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보 〇〇〇(현 〇〇〇〇〇),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준공검사를 용역감독공무원이 실시하였으며, 감독의 직무와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겸직할 수 없음에도 용역감독자가 용역준공검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현 〇〇〇〇〇)과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현 〇〇〇〇〇)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〇〇〇 주각부 ##mm 부족에 대해서는 구조검토 등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〇〇〇〇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조 치 기 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〇〇〇 〇〇〇〇〇〇에서는 〇〇면 일원에 농촌 취락지구의 보건위생상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〇〇〇〇〇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〇〇면 〇〇리						〇〇건설(주)	34%
〇〇〇〇〇(1단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〇〇면 〇〇리							준공

2. 안전관리계획 및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따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적합한 분야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가설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검토서 등 관계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기 법령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위 사업이 맨홀 펌프장 등의 시공을 위해 최대높이 ○○m의 흙막이 가시설(시트파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임에도 계약상대자가 착공 전 제출해야하는 흙막이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서류와 안전관리계획이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규정된 절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하수관거 품질시험 결과 없는 준공검사(1차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분리발주하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규정(환경부 하수 67712-549, 2003. 5.22.)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2-10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 편에 따르면 관거 시공에 따른 경사검사와 수밀검사는 결점부분 발견시 재시공 예방을 위해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검사인 육안 및 CCTV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복구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착공법으로 부설되는 모든 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와 CCTV를 통한 내부검사를 실시하여 수밀검사와 CCTV 및 육안조사 등 품질시험결과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상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수는 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수밀시험 및 하수관 내부 CCTV조사 용역을 충분한 시일 이전에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공공하수도 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가 끝나면 관로 시공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을 시공단계별로 실시하고, 특히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품질검사 성과품 등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도급회사 ○○○○(주) 대표 @@@이 제출한 「○○○○○ 하수도시설 설치공사(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을 받고 ‘21. 01. 21. 준공검사 신청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하수관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밀시험 및 CCTV 조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물량 전체에 대해 관로의 건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필요한 조치없이 준공내역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하고 검사완료조서를 제출하였으며,

[표 1] 준공검사 실시현황

사 업 명	검사내역	검사일	준공 검사자	입회자	비 고
○○○○○ 하수도시설 설치공사(1차분)			○○○	○○○	

※ 자료 : ○○○ 제출자료(준공검사조서) 재구성

[표 2] 하수도시설 준공에 따른 품질검사 현황

사 업 명	사업량	공사기간	준공 현황			CCTV 조사현황		비 고
			회수	검사일	시공물량	시험일자	시험물량	
○○○○○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종합감사 기간 중 ‘21. 2. 21. 본 공사 하수관로 시공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 용역업체로 선정 된 (주)○○(대표 ○○○)으로 하여금 품질시험(CCTV 조사)을 부분 실시(○○km)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하수관 내부의 접합상태 결함과 하수흐름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잡석 및 일부 토사 등이

잔존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영상 확인 결과

관로내 토사 등 잔존 전경	하수관로 이음부 결함 전경
----------------	----------------

관로내 잡석 등 잔존 전경	관로내 토사 등 잔존 전경
----------------	----------------

4. 설계의 적정성 등 설계내역 검토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는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도급 계약된 설계예산서에 페아스콘 ○○○톤과 폐콘크리트 ○○○○톤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차비 ○○○○천원이 중복으로 반영되었으며, 하수관 시공에 따른 터파기로 발생한 토사 ○○○○○㎡ 중에서 되메우기 물량 ○○○○㎡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는 임시야적 하지 않고 사토처리 할 수 있으나, 임시야적장에 야적하고 임시야적장에서 다시 사토처리 하도록 계획하여 약 ○○○○○천원의 낭비우려가 있어, 이대로 공사를 추진 할 경우 공사비 도합 약 ○○○○○천 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할 수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토 공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법령과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검사 등 미흡한 처리에 대해 시정하고 관련지침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확인 서류 미비, 하수관로 시공 후 품질검사 미 실시 등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 ○○○○○○ ○○○○○○ ○○○(현 ○○○○○○○)과 ○○○○○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준공검사 임무를 소홀히 처리 한 ○○○○○○ ○○○○○○○ ○○○○○○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품질검사(수밀검사 및 CCTV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구간에도 검사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관로시공을 위해 토공계획에 과다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 약 @@@@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의 ○○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과 연계한 테마공간 조성으로 자연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관광○○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용역) 기간	용역 및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의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							준공
○○의 ○○조성사업 (총괄)	○○ ○○ 일원							
○○의 ○○조성사업 (1차분)								50%
○○의 ○○조성사업 (2차분)								5%
잔여분								

2. 농지 및 산지전용 등 행정 협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요청하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토지(농지 및 산지)에 대하여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위 사업의 착공(‘○○. ○. ○○’) 전에 농지전용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 ○. ○○. ○○’과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하였으나, 사전 전용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에 착공한 잘못이 있다.

[표 1] 농지전용 신청 및 협의 현황

대상농지			용도구역	전용신청 면적(㎡)	전용 목적	공 사 착공일	협 의 신청일	협 의 완료일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읍 ○○리 ○○리			농업진흥지역 밖 (자연녹지)		○○조성				조건부 협의

또한, 산지의 경우도 공사 착공전에 전용협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 전용협의를 신청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산지전용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산지전용 허가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산지전용 신청 및 협의 현황

대상농지			용도구역	전용신청 면적(㎡)	전용 목적	공 사 착공일	협 의 신청일	협 의 완료일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읍 ○○리 ○○리			농업진흥지역 밖 (자연녹지)		○○조성	'20. 5. 26.	'21. 2. 3.	협의 중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등의 범위와 협의시기를 구분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또는 역사서, 고증된 기록 등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구간에는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르면 해당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완료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는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대상에 해당함으로 규정된 시기에 협의와 조사를 각각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위 사업 총 면적 43,000㎡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신청면적이 ****㎡ 임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계획의 허가 전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²¹⁾를 실시해야 함에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계획면적(㎡)		대상 기준	해당 여부	검토시기	이행여부	비고
		계	산지전용면적					
○○의 ○○조성	○○읍 ○○리 ****번지 일원			5,000	해당	산지전용허가 전	미 이행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

○ 시행령 제6조 1항 항목중 해당 적용분만 재구성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전

※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위 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21)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대상사업 등)에 따라 사업면적 30,000㎡ 이상에 해당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 사업구간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실시설계 용역검사 및 설계변경 등 관리·감독 의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업 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이행하고 검사에 있어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함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는 용역준공검사를 임하면서 계약내용의 이행이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확인하여야 하고, 감사시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현장관리가 되도록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에서는 20○○. 3. 14. (주)*** 대표 ***과 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에서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비 ***천원을 별도의 품목으로 설계비에 반영하여, 20○○. 4. 24. 계약상대자 (주)*** 대표 ***으로부터 용역완료(검수)계를 제출받아 실시설계용역의 준공검사를 하면서 [표 5]과 같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품목록 7개 품목중 용역보고서 및 각종 인·허가 등 2개 품목의 관련도서가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과업지시서와 기타 약정대로 납품 된 것으로 인정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다.

[표 5] 실시설계용역 납품목록(7개 항목중 2개 품목 미납품)

연번	납품도서	규격	계약수량	납품여부	비고
1	용역보고서	A4	5부	미 납품	
2	설계설명서	A4	5부	납품	
3	설계내역서	A4	3부	납품	
4	설계도면	A3	5부	납품	
5	시방서 - 공정표 포함	A4	5부	납품	
6	심의·승인·인허가 등 필요서류	별도	1식	미 납품	
7	Sample Board	비규격	1식	납품	

※ 자료 : ○○○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 재구성

아울러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 계약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높거나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살펴보면 ○○ 조성을 위해 식재 계획인 라벤더 및 각종 초화류 중에서 루피너스는 1년생 초화류로 우리나라 기후의 야외 ○○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할 경우 약 ***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또한 ○○을 조성하는 공간여건을 고려할 때 표준품셈 조정편과 같이 식재작업 조건을 「양호 또는 보통」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부 식재 품을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나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불량」으로 반영하여 약 ***천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등 이대로 추진할 경우 도합 공사비 약 ***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6]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조 정	증 감	
계					
식재공	***1년생초 제외 (관급재료비 및 식재비 포함)				
	*** 식재 품 조정 (불량 → 보통)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숙지 및 법적연찬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행정 절차 이행과 함께 앞으로 관련지침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 ○○○○○ ○○○○○ ○○○(현 ○○○○○○), ○○○○○보 ○○○과 ○○○○○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 ○○○○○ ○○○○○ ○○○(현 ○○○○) 및 ○○○○○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먼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사업착공 후 현재까지 미 이행한 산지전용협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누락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시고, 예산 낭비우려가 있는 공사비 약 ○○○○○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감액)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통보 요구

제 목 ○○○ ○○○ ○○○지구 건축 및 부대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
조 치 기 관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은 『○○○○○○●●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 ○○면 ○○리 ***외 12필지 일원에 경남 \$\$\$ 소재 ○○○(주) 대표 ○○○와 ****, 6. 22.에 계약하고 ****, 6. 26.에 착공하여 ****, 7. 15.에 준공하였다.

공사명	위 치	공사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 신축공사	경남 ○○○ ○○면 ○○리 ***번지 일원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A=●●●●.●㎡	4,065	3,348	717		****,6.26. ~ ****,7.15.	100%

그리고 『○○○○○○●● 주변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 \$\$\$ 소재 (주)○○○건설 대표 ○○○과 ****, 2. 28.에 계약하고 ****, 3. 4.에 착공하여 ****, 6. 4.에 준공하였다.

공사명	위 치	공사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주변 부대시설 공사	경남 ○○○ ○○면 ○○리 ***번지 일원	주차장@대 조성, 식재 \$\$\$\$주, 족구장 건립	591	469	122		****,3.4. ~ ****,6.4.	100%

또한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 \$\$\$ 소재 ○○○(주) 대표 ○○○과 ****, 12. 19. 계약하고 ****, 12. 23.에 착공하여 ****, 2. 7.에 준공하였다.

공사명	위 치	공사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경남 ○○○ ○○면 ○○리 ***번지 일원	내부인테리어 공사(\$\$\$\$)	377	234	143		****,12.23. ~ ****,2.7.	100%

[사진1] **\$ ○○○ ○○○지구 사업현황

2. 건축공사 준공 직후 인테리어 공사 실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신축공사』를 ****, 7. 15.에 준공한지 하루만에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수업무보고²²⁾를 한 뒤 [표1]과 같이 『○○○○○○●●』의 내부 천정과 벽체 철

거·신설 등을 포함하는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 12. 23.에 착공하고 ****, 2. 7.에 준공한 사실이 있다.

[표1]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주요내용

구 분	공사내용	도 면
지하 1층		
2층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그러나 ○○○○은 건축물 내부구획을 변경하고 추가로 수장공사 및 전기공사가 필요했다면 이미 시행중인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합하였는데도, ****, 7. 15.에 건축물을 준공한 뒤 5개월 만인 ****, 12. 23.에 공사 완료된 천장과 조적 벽체를 다시 철거하고 칸막이 공사를 추가 실시하는 한편 마감공사가 완료된 바닥과 벽체에도 중복해서 마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총\$\$\$\$\$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2]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사중복 시행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공사비

22) ○○○○산업과-2972호(****, 7. 16.)

품 명	규 격	수 량	공사비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3. 피난·방화에 불리한 방화구획 및 복도설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하며, 제3조(설치위치)제2항에 따라 일체형 셔터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제2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한다)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 미만인 경우 1.8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르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손잡이 양 끝부분 및 굴곡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 5. 10. ****-●●●●-\$\$건축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의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용도로 공용건축물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지하1층 계단실과 지상2층 계단실에 각각 방화구획을 위해 출입문이 같이 설치된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각 층을 관통하는 계단실에 층간 방화구획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방화벽과 갑종방화문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였으며, 일체형 방화셔터 출입문 주위에는 반드시 축광색 도료를 칠해 셔터의 다른 부분과 출입문이 구분되게 설치했어야 하나 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체형방화셔터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지상1층은 기획전시장과 대강당의 용도로써 해당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로 주계단과 외부계단으로 통하는 복도의 폭을 1.8m 이상 확보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나, 전시장에 면한 가변형 벽체를 설치했을 경우 형

성되는 복도의 유효 폭은 #.##m로 복도 유효 폭 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다.

또한 본 건축물을 공사감독 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경사로 및 옥외계단에 설치된 난간 손잡이에 시각장애인이 계단이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 알 수 있도록 점자표지를 난간 손잡이 시점과 종점부위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사진2] 2층 평면도 및 점자표기 누락 계단손잡이

2층 평면도 (표기부분이 소요폭 미달구간)	외부 계단(다른 외부계단도 전체 동일)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4. TV, 냉장고 등 시설비사용 불가 품목 구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1.시행) 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14-1. 시설비(401-01)는 토지매입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7-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에 [표1]과 같은 물품을 시설공사비에 포함시켜 시설비로 가구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시설비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시설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수 량	합 계(원)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5.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 미배치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7의2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제5호에 따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 시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은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5)」 3.20.1 인방보에 따르면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여야 하며,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mm이상 걸치고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하며,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

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두며, 「건축구조기준 KDS 41 34 03 조적식 구조 설계일반 사항」 1.2.9 수직변형에서는 조적조를 지지하는 요소들은 총 하중 하에서 그 수직변형이 스패인의 1/600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인방보는 조적조가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한 100mm의 지지길이는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내진성능의 확보에서 조적구조의 내진설계는 KDS 41 34 03 조적식구조 설계 일반사항의 1.5 내진설계에 따르며 KDS 41 90 34:****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조적구조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 4.4.1.2. 개구부 인방보에서 상부에 아치 또는 코오벨을 설치하지 않은 개구부에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 인방보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방보의 최소 겹침길이는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폭은 200mm 이상, 굵은 개구부 폭의 1/10 이상이며 최소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건축공사 감리가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를 할 때 해당 공사의 시공·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나 상주감리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은 『○○○○○○●● 신축공사』 조적공사 내역서에 인방보 (200×200mm) ##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준공사진에는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되고 설계내역에도 맞지 않는 100×200mm 인방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물량 정산 등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시설물 설치 금지된 완충녹지에 건설공사 시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1절 토지 이용계획에서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고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역 경계도로 주변은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 하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딩을 설치하여 녹지의 기능과 효과를 제고하고, 당해 구역 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용지(이하 "체육시설 용지"라 한다)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및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주변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직원 후생 복지 및 야영장 방문객의 여가활용을 위해 족구장과 정자를 설치하면서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완충녹지에 족구장의 일부분(약#㎡)이 저촉되어 설치하였으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체육시설 용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나 행정절차 없이 사업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접한 계곡과 ○○○ ○○○지구 간의 적절한 이격과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전석 쌓기 상단 일부가 붕괴된 사실이 있다.

[사진2] 완충녹지에 설치된 족구장과 정자

현황측량자료 (○○○○○○ 제공)	항공사진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7. 공용건축물 공사완료 통보 및 등기절차 미시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 등) 규정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3층 ○○○.○○㎡를 사무실, 직원식당, ○○○, 회의실, 문서고의 용도로 설계·시공하여 ****. @. @@.에 준공하였으며, ○○○ ○○○과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은 『○○○○○○●● 신축공사』를 ****. 7. 15.에 준공하였다면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준공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도 ○○○ ●●●●●에 건축물 공사 완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 ○○○○○○####」 제####으로 #### 개최 시기에 맞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찬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준공된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층간 방화구획으로 부적합한 일체형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 편의기준에 부적합하게 난간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 감리자가 공사기간 중 상주하여 감리하지 않았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족구장과 정자 부지 일부를 완충녹지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공용건축물의 준공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하지도 않아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와 @@@자 ○○○○산업과 지방#### (현 ○○○○과), ○○○○산업과 @##### (현 ○○○○과)과 @@@자 ○○○○산업과 지방#### (현 ○○○○과)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전시장을 운영할 때 전시장과 면한 복도의 폭이 1.8m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가변형 벽체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일체형 방화셔터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시공 하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공사완료 통보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뒤 등기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통보 요구

제 목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

조 치 기 관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은 2018.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의 건축허가와 @@@건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1조(목적)에 따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건축허가)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건축규정’이란 「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제1항에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은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된 건축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 2018. 4. 1.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건의 건축허가와 @@@건의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표본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 ○○읍 ○○리 ○○-2번지 단독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창호일람표에서 창호와 문의 열관류율의 값이 $1.5W/m^2 \cdot K$ 이하가 되도록 하고, 2층에 온수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온수배관과 하부 슬라브 사이에 ‘가’등급 30mm 이상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2층 이상의 층의 창호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나 신청된 건축허가 도서에 이와 관련된 계획이 누락되었는데도 보완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진1] ○○읍 ○○리 ○○-2번지 단독주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위반사항

온수온돌과 슬라브 사이 단열재 설치 누락	열관류율 값 미상의 창호설치 계획

나. ○○○ ○○면 ○○리 ○○-○○번지 단독주택(다가구)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제3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4조(바닥구조) 제2항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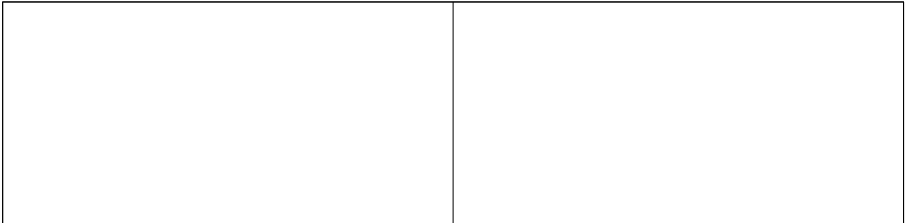
또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층간 바닥의 구조가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을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완충재 위에 마감모르타르 40mm 설치가 필요하고, 창호일람표 등에 창호·문의 열관류율 값이 1.5W/m²·K 이하가 되도록 표기하여야 하나 보완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특히 ○○○ ○○면 ○○리 ○○-○○번지는 면소재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총19가구가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하나 대지 내에 주차장이 별도로 없어 전면 통과도로(2차선) 외에는 사실상 주차할 장소가 없게 되어 주차난 발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확보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진2] ○○○면 ○○○리 ○○-○○번지 단독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세부기준 위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표준바닥구조Ⅱ)	횡단면도 (표준바닥구조Ⅱ에서 마감모르타르 40mm누락)

다. ○○○ ○○읍 ○○○리 ○○-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제3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1]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제3호 차로기준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3호 바닥면적 나.에 따라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에 따르면 발코니의 면적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발코니와 발코니가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 표시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면서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및 별표2 30.복합건축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이 되어 [별표5]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적절한 차로를 확보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나, 직각주차 1면은 1층 출입구 경사로와 저축되고 평행주차 2면은 도로(인도)를 경

유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어 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허가 되었다.

그리고 3층 단독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공제할 때 중복으로 공제된 발코니 면적 @@㎡를 바닥면적에 산입했어야 하나 부당하게 공제된 채 건축허가 하였고, 이로 인해 누락된 발코니 면적을 연면적 ○○○.○○에 합산할 경우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은 1,000㎡를 초과하여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 화재안전이 더 확보된 건축물이 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소방관 진입표시창도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나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폭이 협소한 측면에 설치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진3] ○○읍 ○○리 ○○-3번지 주차장법 및 바닥면적 산정 위반현황	
직각주차 1면 및 평행주차 2면 차로 미확보	3층 발코니 면적 부당 공제

라. ○○○ ○○읍 ○○리 ○○○○-5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제1항에 따라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 따라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오피스텔이 개별난방으로 계획되어 있어 난방구획 마다 갑종방화문 등으로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나 갑종방화문이 아닌 문으로 설치되어 방화구획되지 않았으며, 채광창 전면에 형성된 벽과 지붕으로 형성된 공간은 2층과 3층 사이의 평면 차이로 발생한 ‘베란다’로써 오피스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공간이나 이를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발코니로 간주하고 부당하게 바닥면적에서 공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진4] ○○읍 ○○리 ○○○○-@번지 오피스텔 바닥면적 부당 산정현황	
3층 오피스텔 베란다 면적을 발코니로 간주하고 면적공제	3층 오피스텔 평면도(빛금친 부분 면적공제 부당)

마. ○○○ ○○읍 ○○리 ○○○○-○○번지 의료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고 제64조(승강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향타 및 향발기 등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와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제101조의 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신청된 건축물의 각 부분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및 높이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나, 본 건 설계개요를 보면 건물 높이는 ○○m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8층 계단실 부분의 면적은 ○○㎡로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 적인 281.60㎡의 1/8인 35.20㎡를 초과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므로 ○○m 가 아닌 33.72m가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건축물이 접한 각 대지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나 도면에 기재된 높이인 ○○○m는 건축물 1층 바닥높이에서부터 측정한 값으로 실제로 ○○m에 0.15m를 더한다면 ○○m가 되며,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을 경우 소방관의 소화 및 피난활동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허가 하는 등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하층 공사를 위해 지하를 터파기 하면서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으나 착공신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기술사의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가설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 ○○○ ○○읍 ○○리 ○○○-2번지 의료시설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에 따르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중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5항에 따라 의료시설로 연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환기량은 36㎡/인·h 이상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피난층에 설치된 피난계단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피난에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의료시설로 연면적이 2,000㎡이상이면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구조도면 등에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함께 날인(공인인증) 하여야 하나 설계자가 이를 누락 하였음에도 보완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 ○○○ ○○면 ○○리 ○○-8번지 단독주택 증축신고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고,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신청된 건축물이 지하층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는 우선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였어야 하나, 신청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를 검토한 결과 [사진5]와 같이 건축물의 각 면이 실제로 지면에 접하지도 않았음에도 D동 단독주택을 증축 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 하였다.

그리고 본 건축물과 관련하여 ○○○○. ○. ○○. 및 ○○일에 ○○○ 홈페이지 『@@에게 바란다』에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아니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제목 : ○○○에 대한 ○○, ○○○ 이 건물이 지하입니다.)에 대해서 현장과 도면을 비교·검토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인에게 성실히 답변하였어야 하나, ○○○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해당건축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내 지하층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은 위의 조건에 충족하여 지하층으로 인정되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²³⁾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

23) ○○○○과-○○○호(@@@@@.○.○○.)

다.

[사진5] 건축물 종횡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

아. ○○○ ○○읍 ○○리 ○○○○ 위반건축물 양성화 부적정

[관계법령]

「건축법」에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추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설교통부 행정지침(건교부 건축기획과-188호, 2005. 9. 12.)』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방안”에서 위반건축물을 추인할 때에는 현행법률에 적합할 것을 전제 하면서 1992. 6. 1. 이후에 건축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경우에만 추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9호, 2014. 5. 21.] 제5조(사용승인)에서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경우에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사의 설계를 거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구조안전·위생·방화·도시계획·일조권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건축되어 건축물의 붕괴사고(진주 장대동 4층 건물 붕괴사고) 및 화재사고(충북 제천 화재참사)로 이어지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위반건축물의 경우 자진시정이 원칙이며 현행법률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은 농어가주택에 해당할 경우만, 공장·창고시설은 농어가용일 경우만 가능하다.

[확인된 위반사항]

○○○은 허가 없이 건축되어 사용승인 절차가 누락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할 때, 「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 일괄협의회)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본 건 증축(양성화)건축물 중 동번호 ‘하’(단독주택-창고 ○○○○㎡), ‘나(라)’(창고시설-창고 ○○○㎡)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다.

[사진6] 농림지역에 걸쳐 건축된 건축물 현황

용도지역 현황 (녹색부분이 농림지역)	배치도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건축담당 직원은 부족한데 관련 업무범위가 점차 많아져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었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건축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 내용이 한국건축규정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한 @@@@ ○○○○과 지방○○○○ ○○(현 ○○○○과), @@@@ 지방○○○○○ ○○○(현 ○○○○과), @@@@ 지방○○○○ ○○○(현 ○○○○과)과 @@@@ ○○○○과 지방○○○○○ ○○○(현 ○○○), ○○○○과 지방○○○○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건축법령 등에 맞지 않게 설계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읍 ○○리 ○○○○-5번지 업무시설 설계자 ○○○○○ 건축사 ○○○과 ○○○○○○읍 ○○리 ○○○-2번지 의료시설 설계자 ○○○○○ 건축사 ○○○과 ○○○○○○읍 ○○리 ○○-3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번지 단독주택 설계자 ○○○○ 건축사 ○○○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른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착공하지 않았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읍 ○○리 ○○-2번지 단독주택, ○○○면 ○○리 ○○-○○번지 단독주택, ○○○읍 ○○리 ○○○○-5번지 업무시설(오피스텔), ○○○읍 ○○ ○○○○-2번지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허가사항 변경 후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승인 된 ○○○읍 ○○리 ○○-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부당하게 공제된 발코니 바닥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고 부설주차장의 차로를 확보하며, ○○○○○○리 ○○○○번지 단독주택과 ○○○○○○읍 ○○리 ○○○○ 단독주택은 층수와 용도에 맞도록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통보 요구

제 목 ○○ ○○○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
 조 치 기 관 ○○○(○○○○○과)
 내 용

1. 업무개요

○○○에서는 『○○ ○○○ ○○○○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
 번지 외 76필지 일원 경남 ○○○ 소재 (주)○○○○ 대표 ○○○과 *. 9.
 28. 계약하고 ****. 10. 5. 에 착공하여 감사일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명	위 치	공사내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 건립사업	경남 ○○○ ○○○ ***번지 외 ##필지	○○○○ (A=****.##㎡)	1,579	162	1,417		****.10.5.~ 2021.2.28.	10%

2. 사업비 초과를 사유로 공사규모 축소 후 설계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

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
 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
 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
 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일상감사)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약 등의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
 일상감사규정」 제2조(범위)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대상 중 시설공사의 경우 설계
 변경 10% 이상 증액 시 설계변경 시행 품의 전 일상감사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 건립사업(건축)』을 위해 ○○○ ○○○○

담당관으로부터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²⁴⁾받았으며, ○○○ ○○○○○과에서는
관급자재인 ○○○막구조물(###백만원)을 ○○과에 구매의뢰²⁵⁾ 하였으며, ****. 9.
23. ○○○ 계약심의결과(원안가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 ○○○○○과에서는 『○○ ○○○ ○○○○ 건립사업(건축)』의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 협회로부터 막구조 건축물의 측면이 개방되어
있어 외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물 측면에 외벽을 연장하는 것
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사비가 당초예산(사업비)를 초과하게 되어 공사발주가 어려
워지게 되자 건축물의 규모 축소나 사업변경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 막구조물의 좌·우측의 주
요 골조와 막을 제거하고 공사를 발주하였고, 착공 이후 당초 사업비 부족분 반
영을 위해 관급자재인 ○○○막구조물을 변경구입²⁶⁾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를 위해 제출했던 건축구조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의 골조도면을 보면 좌·우측 주요 골조와 막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
계산이 되었던 반면, 공사발주 시 건축공사 설계내역과 설계도면에는 주요 골조와
막이 누락되어 지진이나 풍하중 등 외력에 대해 각 방향의 변위를 충분히 제어
하도록 철골트러스 구조부가 설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구조계산되었던 대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설계내역을 조정하여 공사발주하고 사후에 설계변경·보완 하는 등 『○○ ○○○
○○○○ 건립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또한 관급자재인 ○○○막구조물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백만원에서 ###백
만원으로 공사금액이 약17%가 증가되어 설계변경 시행 전 일상감사를 득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4) @@@@-@@@@호(****. 8. 4.)
25) ○○○○○과-@@@@호(****. 8. 12.)
26) ○○○○○과-@@@@호(****. 12. 16.)

[표1] 공사발주 및 특수구조 심의 도면 비교

공사발주 시 구조도면(우측면도)	특수구조심의 도면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3. 특수구조건축물 심의 내용과 다르게 건축허가 및 공사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정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및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기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신청하여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시설 용도의 공용 건축물 증축협의를 ****. #. ##.에 실시하고 협의 통보²⁷⁾를 받았으며,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를 위해 ****. #. ##.에 ○○○ ○○○○○에 건축위원회 구조심의 신청을 한 뒤 ****. #. ##.~#. ##.까지 서면심의를 실시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²⁸⁾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 ○○○ ○○○○ 건립사업』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내용을 보면 양 측면에 주요구조부와 막이 설치된 조건으로 구조검토하여 심의를 받았는데, 건축 협의 시 도면은 이와 상반되게 우측면과 좌측면 각각 구조물과 막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내진성능과 풍하중이 서로 달라 건축허가의 내용과 심의내용이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표2] 공사협의 및 특수구조 심의 도면 비교

건축협의 시 구조도면	특수구조심의 도면

출처) ○○○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은 『○○ ○○○ ○○○○ 건립사업』를 시행하면서 「건축법」 제 19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므로 ****. ##. ##. 착공신고를 접수한 뒤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건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착공신고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기공공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27) ○○○○-####호(****. 10. 15.)
28) ○○○○-####호(****. 7. 31.)

4. 건축사보 배치신고 지연 처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7의2에서 운동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제5호에 따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 시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은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증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건축공사 감리가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를 할 때 해당 공사의 시공·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나 상주감리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으며, ○○○ ○○○○○는 @@@@. @@. @@.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착공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이면 발주부서 또는 건축공사감리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제출하도록 보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보완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다.

5. 납품된 건축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감독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 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1항에 따르면 특수구조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 건립사업』의 막구조물이 특수구조설계도서로써 구조도면을 작성할 때 건축사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하나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였으며, 관급자재 변경되어 작성된 설계 도서에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설계도서의 부실·누락·오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공사감리보고서에 건축감리자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제출된 공사감리보고서(중간)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기술자가 날인한 사실이 있다.

6. 빗물 재이용시설 활용 설비설치계획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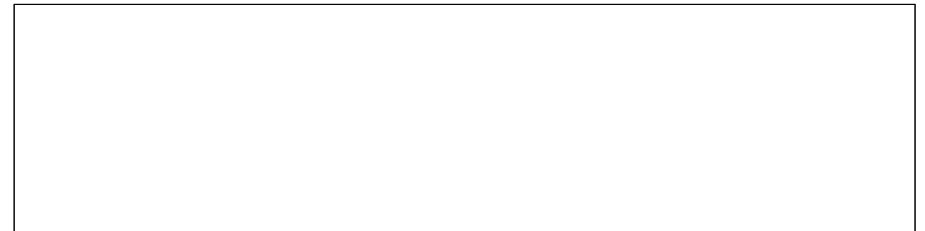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 건립사업』를 실시하면서 막구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貯溜槽)를 설치하였다면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필수시설을 누락하고 공사발주하여 공사완료 후 설치가 완료된 빗물 재이용 시설을 사실상 불능상태로 만들게 됨에 따라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사진1] 빗물재이용시설 계통도



7.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검토 소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은 『○○ ○○○ ○○○○ 건립사업』이 연면적 *****㎡의 건축공사로써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착공 시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2항에 따라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이 적절한지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의 질문답변 내용은 ### 협회의 요청과 현장여건 상 공사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었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과 업무 연찬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는

①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임의로 물량 축소 후 공사발주한 뒤 부당하게 설계변경하고 일상감사를 누락하였고, 건축협의 내용과 상반되게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심의를 받았으며, ○○○ ○○○○○에 제출된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착공하였고, 특수구조건축물 감리완료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고 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았으며, 빗물 처리시설의 필수시설 설치계획 일부를 누락하였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도 않는 등 전반적으로 건설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 @@@와 감독책임자 ○○○○○과 지방@@@@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심의 내용과 다르게 설계되고 건축협의된 내용을 심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 ○○○○○와 재협의하고 지연된 착공신고 및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 후 공사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내역에 품질관리비용을 계상 후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고 빗물 재이용시설에 모은 빗물을 화장실 등에 공급하는 송수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